

第278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08年11月5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계속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원주 출신 이계진 의원입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이틀간 여러 의원

님들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느낀 소회라고 할까,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짚막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흘려서 길에 떨어진 감자 한 알을 두고도 무슨 의도일까, 부자들은 감자 따위는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쟁점을 만들어 내고 정쟁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 정치 풍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전인수 격이고 평지풍파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은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구성된 국회라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KBS와 YTN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임명했던 절차와 방식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KBS 사장의 경우는 일반인들은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인물로서 새로 임명된 지금의 사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당히 괜찮은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주장은 이번 그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장은 더욱 객관성이 보이는 전혀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군 장갑차 사고로 죽은 두 여중생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몇몇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격분했

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대한민국 관광객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매우 조용합니다.

쌀 직불금 문제는 과거 정권에 의해서 허술한 제도와 안일한 관리로 1683억 원이라는 국가 재정을 잘못 썼고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범법자를 양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농심의 동요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발표조차 안 해 놔서 또다시 중복 범법자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8만 명 중에 몇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한나라당과 현 정권에 책임이 있는 듯 정치적인 공격거리로 삼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철저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거리로만 삼는 풍토는 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이계진 의원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광역단체 모두의 관심사인데, 30년간 무려 5조 6000억 원 그리고 초기 3년간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프로젝트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는 2007년 6월 4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기·제약·의료서비스 3개 분야를 분산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2차 용역 결과를 전면 무시하고 민간위원들과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분산이 아닌 집적 추진 방식을 실질적·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현재 까지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2006년 산업연구원에 1차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2차 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를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식을 결정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예, 확인한 것입니다.

2006년 6월 1차 용역에서는 분산이 아닌 집적 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이계진 의원 그런데 두 달 후 2006년 8월에 다시 2차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1차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회의 시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보고하고 토론할 그 당시입니다. 신규단지 조성 과 기존 단지의 기능적 연계 방안의 비교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검토와 또 1차 용역 결과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인 그와 같은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2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지요, 분산형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007년 3월에 발표된 2차 용역 결과는 3개 분야를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보다는 분산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계진 의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2차 용역 결과가 나온 지 3개월 후인 6월 4일 이를 무시하고 용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의료기기·제약·의료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를 한곳에 모아서 조성하는 방식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강행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계진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집적형 혹은 분산형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집적 방식은 지역별 역량평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2차 용역 결과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다양한 의견과 또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007년 6월 4일에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계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 결과는 분산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집적하는 방식으로 정식 안건으로 통과를 시켜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들어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정상적 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위원들은 '동사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정부는 국무조정실입니다.

분산해야 한다는 2차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모아야 한다면서 안건을 만들어 와서 위원들에게 집요하게 통과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즉 위원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등 두 번에 걸쳐서 상정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8월 국무조정실 신모 차장이 롯데호텔로 소위 위원들을 호출해서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식회의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신 차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라도 해 달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모 차장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관련부처 국장회의에서도 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국장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자 책상을 두드리 가면서 반대를 제지하고 목적인 대로 회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정황 혹시 듣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회의가 2007년 5월 22일에 조찬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았

는 겁니다. 30년간 5조 6000억이 들어가는 대책 사업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관계에 관해서는……

○**이계진 의원** 다시 한번 지난 정부의 총리실 차원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제의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회의록이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 결과 자료라는 한쪽짜리 문건으로 사후 정리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성하고도 공개할 수 없으니까 둘러대는 것 아닐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 정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6월 4일에 총리 주제로 그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를 보도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부처별로 회의 결과 공문 시행안을 보낸 것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계진 의원** 총리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실무자가 회의록이 있었는데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쪽짜리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당일 4건의 안건 중 2호 안건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이 상정되어서 원안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에는 통과되지 못했고, 7월에도 재상정되었으나 또다시 통과되지 못하다가 결국 8월 신모 차장이 소위원회 위원들을 롯데호텔로 불러서 호통친 정식 회의도 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총리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는 은폐를 위한 허위로 조작된 것이 명백한데 총리께서는 회의록의 원천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누군지는 모르는 실세에 의해서 움직인 공무원들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30년간 5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국민 세금만도 2조 8000억 원이 드는 국가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의료산업 발전에도,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료복합단지 는 절대로 우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지금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굉장한 하자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규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제 생각에는 연구중심단지쯤 만들어 놓고 연구비 펄펄 쓰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천 무효로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관련해서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에도 대립·갈등이 심합니다. 총리께서 선 지방 지원,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반 성장, 병행 추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확실한 정부의 태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의 입장은 수도권과 지방 발전이 선이나 후냐, 경이나 중이나와 같은 이분법적인 그와 같은 시각이 아니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다양한 지방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다만 불안정한 그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기업 재정 활성화를 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경기회복을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현재의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지적으로?

○**국무총리 한승수** 현재의?

○**이계진 의원** 저항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승수** 뭐, 저항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지방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후속 대책이 나오도록 돼 있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경제가 더 성장한다 그러면 그 과실도 선진국 예에 따라서 환류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그와 같은 모형을 그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탄 일방적 발표라고 생각하는데, 전면 재검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와 같은 기회를 탔다기보다는 본래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의 골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규제는 보호하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 나쁜 규제는 푸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근간에 입각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만 국제금융 위기가 이렇게 급속하게 오고 그에 따라서 세계 실물 경제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체 큰 근간 속에서 있는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총리님께서 현재 심각성을 깊이 이해 못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검토를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뭐,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고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의원** “재검토 건의”라는 말씀을 대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마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마빚 때문에 자살자가 끊이지 않

고 OECD 평균의 2배 정도의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사회 경마장 앞의 사채업자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들었습니다. 선이자를 빼고 열흘에 뭐, 이율을 이렇게 높여……

○이계진 의원 이율이 한 600%에 가까운……

○국무총리 한승수 1년 이자율이 거의 570%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계진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발표 예정이었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용역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청회를 했고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관계부처와 사업자 간의 협의라든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또 위원들 간의 심층적인 토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정부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사감위가 마사회와 주고받은 공문을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거의 마사회는 사감위에 대해서 반박 수준을 넘어서 요구, 명령, 압박지르기 수준입니다.

마사회가 사감위 꼭대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위기 느끼지 못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마사회가 사감위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감위가……

○이계진 의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2%도 안 되는 1000여억 원 정도의 특별적립금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6조 5000여억 원이 넘는 경마 도박관을 벌이는 이러한 마사회의 행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사감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감시감독을 사감위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본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특별적립금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80%로 이렇게 규모를 상향하는 것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특별적립금의 사용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 거의 잊고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관장합니다. 족발이나 보쌈은 식약청에서 관장합니다. 치즈아이스크림은 농식품부, 과자류는 식약청입니다.

이거 온통 헛갈립니다. 인삼 등 한약제도 통제로는 농식품부, 약재로 썰면 식약청입니다.

대한민국의 식품관리 문제를 일원화해야 되는 문제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원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민관합동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널려 있는 이와 같은 안전 문제는 중국적으로 총리실에 종합해서 이와 같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하게 된 이유인 즉은, 그동안에 농림부를 1차 산업만 담당하는 이와 같은 부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 산업까지도 농림수산부가 담당을 해야겠다 해서 식품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서 식품의 안전 관계에 관해서는 농수산식품부가 계속 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 부분이 2차·3차 산업까지도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떠넘기기를 하는 문제를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번에는말로 반드시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만 명의 부당 수령자 가운데 17만 명이 공무원인데 이들은 범법자가 됐습니다.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에 함께 연루됐습니다.

참여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하면서 단 다섯 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감사를 해 놓고도 발표조차 안 한 것과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 다섯 줄짜리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과거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제도상으로, 운영상으로 미비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차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가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오늘 국제인재, 글로벌 인재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식에 참석해서 개의사를 하시고 바로 오시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거기에 차관이 가시고 장관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워낙 국제행사기 때문에……

○이계진 의원 뭐, 수용했다니까 저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대학 통합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 원주대와 강릉대학의 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해결 못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의원님께서도 뭐,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이제 강릉대하고 원주대학교 통합할 때 당초 합의한 내용은 이

교명을 그 지역명을 배제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1순위로 강원제일대, 2순위로 강일대, 3순위로 명원대 이렇게 해서 1개를 선정키로 했습니다.

○이계진 의원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지역명이 들어가는 건 썼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이제 그 이후에 뭐, 양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정을 내고 그래서 다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91.7%로 찬성을 한 강릉원주대로 이렇게 교명 신청을 지금 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양 대학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의견을 나누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그것은 앵무새 답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할지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계속 두고 볼 것인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대학의 교명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깊게 개입하기보다는 대학 스스로 최고의 지성 집단이 서로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왜 책임 안 지려고 자을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과학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그런데 교명까지 교과부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의원 교명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 아닙니까? 통합을 누가 유도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통합 시에 서로 양 대학에서 교명을……

○이계진 의원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아니, 통합은 추진했지만 교명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의원 어떤 식으로 할지 방법을 얘기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우선 지금까지 양 대학의 총장을 비롯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워낙 지역의 입장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계진 의원** 원천무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통합을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교명 문제 때문에 통합을 원천무효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이계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해서 이계진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진 의원 소개로 광주 서구 지역구민 40인이 와 있습니다.

또 정두언 의원 소개로 서대문울구의 지역구민 여섯 분 등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의석에는 180명 내외의 의원들이 와 있습니다. 국회의 새로운 모습, 국정을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습, 이런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촌 117개국에 계시는 감사하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자산이신 존경하는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성지 빛고을의 광주 서구를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매우 각별한 심정을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참여정부의 초대 농림부장관을 사임하고 정계를 떠난 지

5년여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마침내 새만금 사업은 다시 살아나고 저 또한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 복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융 위기 의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 위중한 때에 온 국민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백지장까지도 같이 함께 맞들어야 할 이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좌파정권이라는 극단적 분열정치의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을…… 사실 지난 이틀 동안에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조차도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가 튼튼해졌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 갑자기 왜 말을 바꿨습니까?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이틀 동안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훼손이 됐습니다. 또 양극화도 심화가 됐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제가 튼튼해졌다고 한 것은, 어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어 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영진 의원** 그게 단순한 외환보유고 문제를 말씀하시는 데요, 좋습니다. 경제만 놓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도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 잃어버린 허송세월 10년이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로서는 지금 과거보다도 앞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지혜와 능력을 합쳐서 앞의 나라 발전에 총력을 다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의원** 총리,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

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진압이 정당했다고 우기고, 청와대·국정원·여당이 밀실에 모여 언론장악 음모를 꾸꾸는가 하면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정부 비판을 아예 못 하게 하고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이라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심지어 좌파정권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좌표를 그대로 투영한 새 교과서를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밀어붙여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란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나아가 할 올바른 방향인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직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아마 곧 나올 줄 압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때 공평한 이와 같은 논평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진 의원** 아니, 총리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촛불문화제를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고 하는 반복적인 보도가 나와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 안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없고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총리, IMF 외환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한 국민의 정부의 업적마저도 잃어버린 10년입니까?

당시 국민들의 눈물겨운 금 모으기 운동, 700만 해외동포들의 달러 보내기 운동마저도 좌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할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최소한 정치에도 금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부인하고 또 현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내시고 56회 유엔 의장으로서 유엔을 대표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는 아직도 지난 10년을 부인하면서 무조건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권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 성장잠재력이 거의 3분의 1로 이렇게 내려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 의원** 총리, 상황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총리의 편협한 역사관에 참으로 큰 우려와 염려를 표명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역사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좌파정권이 국가 정통성을 훼손했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교과부가 수정 권고한 55개 항 중에 좌편향이 크게 문제되었거나 국가의 정통성이 그렇게 까지도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그 교과서를 구해서 읽어 봤습니다마는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역사는 서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가 근대·현대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서 8·15광복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거나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김영진 의원** 총리!

총괄적으로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근·현대 교과서를 총괄해서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말하고 우리 헌법대로 집필자에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좌편향되었다, 좌파들이 만들어낸 교과

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것 지금 일반적으로 이 55개 항목이 나오니까 언론과 역사 학자와 모든 분들이 '그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 권 고안을 거부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교과서 좌편향에 대해서 예단하는 일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교과서 개편 작업,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개편할 겁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는 굉장히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 역사교과서 수정은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건국 이후 정말 자랑스러운 발전과 또 기적과 성공의 역사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또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을 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정직하게 "예"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교체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잘못 기술한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 시점이 마침 정권이 교체된 그 시점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사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총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해설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철현 주일대사를 긴급 소환하는 등 요란하게 문제를 지적하더니 오늘에 와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왜곡과 독도 수호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온 반크(VANK), 독도아카데미 등의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국감 질의로 이를 저지시킨 일이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총리, 큰 상을 주어야 할 분들에게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7월 14일에 중학교 사학과 교과서 학습지도령 해설서에서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주일대사의 일본 외무성 방문항의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항의서한 전달,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총리실에 독도영토관리 대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는 독도대책반, 동북아역사재단에는 독도연구소를 신설해서 독도 문제와 관련된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굉장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반크 자체가 최근에, 제가 알기에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재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코 반크의 활동을 왜소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끊어버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도 다르네요? 국정감사에서 이 반크 문제가 지적이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뜻있는 역사학자나 관계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 대통령께서도 반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총리께서 지금 반크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한 거짓말을 하시

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난주에……

○김영진 의원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잠깐요, 총리께서는 정부에 대해서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왜곡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합당한 조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것은 먼 날도 아닙니다. 불과 한 이삼일 전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가지정 독도전문연구센터,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영진 의원 동해연구소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관은커녕 차관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입니까? 이렇고도 정부가…… 말로만 독도를 지키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의 불신이 날로 깊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반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반크에서 2009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 쪽 측에서…… 그러나 저희로서는 반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에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병만 교과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 지난 10월 28일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의원 일견 보기에는 아주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장관, 이렇게 하시면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의 휘어진 허리가 좀 펴지겠습니까? 그리고 기러기야빠, 도우미엄마 노릇 이제 그만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시키느냐 그쪽에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까지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면 공교육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응수해 왔고 공교육이 마치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 대책도 참으로 한심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그 핵심적 요인은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일제고사로 학교를 줄 세우고, 국제중학교 자사고 특목고를 늘리고,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학교 자율화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는 등 영어교육에 올인 하는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정책 때문에 오늘의 공교육은 날로 황폐화되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없이 정부는 그저 학원만 단속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공교육이라는 세 단어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엇박자 교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10%씩을 절감해서 영어교육 강화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의원 장관, 그런데 급식비 미납 학생이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급식비……

○김영진 의원 예,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 굶는 아이들 등 지금 급식비가 체납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정부가 오늘 고통 속에,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사교육비 증가가 월 1000만 원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봉급 생활 서민들 자식들은 급식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점심 굶는 아이들이나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이 얼마인가 주무부 장관께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급식비 미납 학생이 2006년에 1만 7000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2만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6000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 체납 학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관, 정부가 학생들이 교육받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될 것은 고사하고 밥은 설렁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영어를 배워라 이것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급식비 해결이 더 시급합니까, 영어교육 강화가 더 시급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비 먼저, 제가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이 잘돼야 사교육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면 공교육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공교육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 대체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잘 공급하면 또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영진 의원 장관, 본 의원이 공교육에 대해서, 가령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공교육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교육은 장관 답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영어몰입교육에 학생들이, 지금 영어몰입교육 안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했고 장관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의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54개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깐 오히려 학원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는 국제중학교,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심각성을 더욱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김영진 의원 제가 한 가지 꼭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을 강행하라 하고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다면 장관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위원들하고 이것을 강행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지금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무부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업자의 돈과 급식 납품업자의 돈 그리고 학교 관계자의 돈을 받아서 자신의 선거를 치른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서 또 지금 강행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관, 이쯤 되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해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 설립을 결의하는 날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독려하고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부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과부장관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합니다.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제 질문을 이제 마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분열과 배제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허원제 의원의 소개로 부산진갑 지역구민 45인이 방청 중입니다.

다음은 허원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갑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되짚어보고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우리의 매체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정부 10년이 남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첫째는 코드인사를 중심으로 한 이념화와 편 가르기입니다. 둘째는 기사실 대못질과 같은 언론 통제입니다. 셋째는 시장 통제를 통한 매체 간 평준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공영 언론사의 사장은 코드에 맞는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기사실 폐쇄를 통해서 언론의 취재활동 영역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 간 평준화로 미디어산업시장을 또 왜곡시켰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경직된 이데올로기로는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디지털시대이자 인터넷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서 매체 융합이 이루어지고 또 인터넷시대에는 국경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도록 자율과 경쟁 그리고 개방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부터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KBS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우리 총리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야가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KBS가 정말 진정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히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렇게 해야 인선 과정에서 소위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 이사와 그리고 사장을 직접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점이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불신의 어떤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사장의 경우는 이사회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임명 절차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KBS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간혹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제 의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직 우리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공영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NHK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KBS 이사회와 같은 일본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총리가 임명을 합니다.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동의하는 그런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KBS 사장과 같은 일본 NHK 회장은 12명의 경영 위원 중에서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KBS는 절반 이상 이사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NHK는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NHK의 경우에는 경영 위원 12명 중에서 또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이상의 이사 동의를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NHK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장 교

체 문제가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일본의 이러한 NHK 공영방송 제도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 있는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원제 의원 좋습니다.

비슷한 영국의 BBC의 경우도 우리가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지칭을 하는데 이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주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한건주의식 미디어 정책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규제 만능이 빚은 광고정책 실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위성방송과 지상파 DMB, 위성 DMB, 지금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누적 적자만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성방송과 이 DMB 사업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이 사태는, 지난 정부가 매체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방송 광고시장 그리고 특히 유료방송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광고 물량에 대한 공급정책 없이 단지 한건주의식, 미디어 매체 하나를 더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한건주의식 발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동안의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송 광고시장 개선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지금 3개 매체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총리께서 좀 더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지적한 3개 뉴미디어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IPTV가 새로운 시장에 이 달부터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3만 6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8조 9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IPTV사 측도 앞으로 5년간 4조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정부가 위성파 DMB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그런 장밋빛 전망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 IPTV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사업 정착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와 각 사업자 간에 콘텐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기존 매체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그러면 IPTV의 성공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지금 총리께서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시장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료와 광고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PTV 수신료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의 수신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TV 때문에 위성방송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IPTV가 성공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케이블TV 외에 신규 채널들이 많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신규 채널들은 또 주 수입원이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시장의 확충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장 붕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비추어서 광고시장의 확충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를 막고, 경제가 하루속히 고속성장 궤도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문제의 대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그 일반론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27년간 묶여 있는 KBS 시청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KBS 시청료를 제가 볼 때는 당장 인상해야 됩니다. KBS 2TV가 지금 현재 연간 약 6000억 원의 광고료를 갖고 있는데 이 광고를 폐지하고 일반 시장으로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체시장에 광고물량이, 다소 시장의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로 우리 국민 경제가 다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KBS 시청료 인상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지금 81년 이후에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정발살을 깎는 이와 같은 자구 노력, 경영환경 개선 이와 같은 엄정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KBS에 대한 애정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시청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KBS 자체의 자구 노력이 절대로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원제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KBS의 경영합리화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시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미디어랩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KOBACO 중심의 광고 독점체제, 이것은 선진사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민방이라든지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간 한 90억 정도 걷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면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2000억 이상 매년 걷히는 방송발전기금의 적립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복수의 미디어랩 제도 도입,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미디어랩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광고시장 확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상파 광고의 각종 규제를 앞으로 철폐해 나가야 됩니다. 중간광고, 간접광고 또 광고 총량제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지상파 광고를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달 광고가 60%, 이달은 지금 50%입니다. IMF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지상파가 더 이상 미디어 시장에서의 강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광고시장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느냐 하면 GDP 대비 광고시장 규모가 미국은 2%, 일본은 1.4%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0.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나라 광고 성장잠재력이 많이 있다라고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1000조 되니까 0.1%포인트만 올려도 1조 이상의 광고시장 물량이 늘어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총리께서 이런 각종 광고 규제를 철폐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하고 아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고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지금부터는 케이블방송국(SO)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약자인 채널사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그런 사실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면,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가운데 약 25%를 채널사업자한테 주기로 당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자인 채널사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자율합의’라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앞으로 3년간 20%만 주겠다고 이렇게 5%를 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널사업자들이 3년간 2500억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총리께서 이 케이블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 악용 방지를 위해서 소관 부처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에서부터 방송수수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신료 배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허원제 의원 총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바로 지난 달 24일에 채널사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수신료 20%를 주겠다고 합의한 약정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VOD 콘텐츠 구입액도 이 20%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것은 당초에 없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3년간 하면 412억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거의 30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약자들에게 부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진상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재허가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IPTV가 최근에 새로운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 모든 방송사업자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출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라든지 위성방송은 지난번에 각각 300억씩을 냈습니다. 또 위성DMB는 137억을 내고 케이블방송사들도 모두 합쳐서 25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IPTV 3개 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수백억에 이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IPTV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 따라서 허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문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허원제 의원 마지막으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까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창이 두 차례 연속 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이제 삼수에 나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 차례 연속 도전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세 차례 연속으로 도전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연속 도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태리라든가 미국에서는 세 번 이상 도전해서 올림픽을 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차례 도전을 했다가 또 한 몇 년 준비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도전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마는 세 차례 이렇게 연속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 4개 도시가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올림픽 유치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 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계올림픽이든지 동계올림픽이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정부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선택을 하실 때 유치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또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가지고 결정을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 산업은 우리에게 부와 정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세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고립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융합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성장토양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 중심의 낡은 좌파적 매체 정책을 버리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활짝 열린 새로운 정책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허원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용경 의원 소개로 일곱 분이, 김영선 의원 소개로 일산 신일중학교 학생 80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저는 18대 첫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가 처한 이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5개국 중 6~7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인프라와 IT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뛰어난 덕분인데, 총리는 이 점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IT가 우리 국가경쟁력 향상

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께서 바로 이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총리의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던 IT도 지난 수년간 나라 정책이 실기(失機)를 하면서 이제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에 뒤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으로 녹색성장, 그린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녹색성장이 IT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대단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녹색기술(그린테크놀러지)하고 IT가 융합을 한다고 그러면 파파력,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IT는 ET, BT, CT 또 스페이스 테크놀러지(Space Technology) 등 여러 분야에 공통으로 쓰이는 플랫폼으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그린비전도 IT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도 이 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이용경 의원 그린에너지, 녹색성장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명제지만, IT는 우리나라가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있고 또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과 건설경기 진작에 집착하기보다는 제조업 평균보다 12배의 고용효과를 갖고 있는 IT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리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보면 제조업도 중요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IT 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특정 제조업이나 특정 IT보다는 골고루 이것들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내년 국가 정보화 예산은 올해보다 7% 감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T 산업이라는 것이 인프라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정보화 부문에 7% 줄이고 또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정보화 지원 예산도 16% 줄

여서 모두 작년보다 2500억 원을 줄여 버렸습니다. 관련 중소 IT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중소 IT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보화 예산을 늘리고 또 여기에 조기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이 분야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보화 예산은 3조 155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 정통부 인건비라든가 기본사업비 이런 것들이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지 개선해서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모두 고려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수준이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작년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용경 의원** 그런데 금년 정보화 예산이 3조 4000억 원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이 6.5% 증가한 것에 맞춘다고 하면 3조 6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리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 수준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이용경 의원** 여기에 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 진작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분야에 한 4~5조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총리께서는 정보화에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 기회에 한 발짝 앞서 나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또 정통부 해체 이후에 정보화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졌습니다. 총리께서 이 분야를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분야가 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IT 산업에 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리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T와의 융합관계를 철저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문제는 전에 IT라고 분류되던 것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로 다 나뉘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오시면 질문을 거기다 해야 될 텐데 안 나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질문이 총리께 향해 있습니다.

IT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내는 재원이 주파수 할당대가 등 네 가지나 되고 올해 그 규모가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전파법에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와 진흥에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내고, 사용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출연하는 각종 재원을 한데 끌어 모아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고 이를 과감하게 IT와 관련 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과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이걸 통합해서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라든가 지경부라든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성패는 북측 근로자의 참여에 달려 있고, 작년 11월 남북 총리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입주기업들은 인력 수급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 이유를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알기에는 인력 수급 상황의 어려움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20대·30대 여성인력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어 그렇단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숙소와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힘이 겨우니까 정부가 숙소를 우선 지어 주고 차후에 기업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통근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인근지역 근로자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은 사실 대규모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건설방식에 따라서는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앞으로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가 더 이루어져 가지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협의 되고 또 결정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경 의원 예.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사실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복합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 점 때문이라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다음은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사이버 모독죄 신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몇 개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포털의 악성 댓글을 줄이는 문제를 떠나서 사이버 공간이 과연 우리 생활 공간의 연장인지, 아니면 별개의 속성을 가진 공간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실제 생활 공간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이버 공간은 우선 비대면적이고 그리고 또 정보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상 공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경 의원 총리는 다르게 생각하시는군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용경 의원 저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 일상생활이 사이버로 조만간에 옮겨가고, 그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IT

국가로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생활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경 의원 현실 공간에서는 명예훼손이 일어난다면 그에 관해서 고발하고 처벌하게 하면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달리 처벌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민주주의 국가 중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 댓글의 감소임을 고려할 때, 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번 자살사건 때 각종 악플이 실제로 돌아다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명제를 하고 있는 사이트나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잉 반응이고, 혹여나 인터넷의 잠재력을 반감시키는 우려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사실 인터넷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행위의 피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광범위합니다. 또 사후에 복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설이나 비방, 사이버 폭력 피해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저는 포털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총리께서 걱정하시는 빠른 전과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심의 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혜를 같이 모아서 사이버 모독죄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기 전에 포털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잠재력을 반감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사이버 공간이 사회의, 소위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 좋은 통신의 수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악플이라든가 이름을 숨기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사이버 공간의 악플에 의해서 자살하는 자살률과 일반 실생활에서 자살하는 자살률 이것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법무부장관은 아마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경 의원** 그러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 무조건 사이버 공간을 비방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총리로서는 알맞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포털 사이트에는 악플뿐만 아니라 선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악플이 명예훼손을 하고 숨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악플에

의한 피해와 실생활에서의 비방에 의한 피해에 대한 비교가 있으시나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자료는 없습니다. 마는 하여튼 악플이 없다고 그러면,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에 저촉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선플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악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 이것이 선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그런데 총리도 아시다시피 비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일반적으로 비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방이 아닌 것하고 비방인 것하고는 비교적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철저한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지, 았으면 저희가 몬스터(monster)를 키운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사행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의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까. 다마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이용자 66%가 중독자라고 그러합니다. 또 도박 유병률도 9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스포츠 토토’도 가세해 가지고 가히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강원랜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용경 의원** 강원랜드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국회의원을 하던 초기에 강원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때. 그래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서 강원랜드를 시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5~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용경 의원**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행산업에서 3조 6000억을 번다고 하지만 여기에 비용이 1조

5000억 이상이 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연 나라가 이러한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떳떳한지, 이거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이 돼서 그것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행산업은 사실 여가나 레저를 위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중독성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이라든가 도박 중독 우려자에 대한 조기 치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경 의원** 그런데 이용자의 66%가 중독자인데 이게 과연 오락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중독자에게는 이것은 오락은 아니지요, 물론.

○**이용경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박 중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규 교과에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 예절과 게임 중독에 대한 것은 정규 교과에 포함돼 있는데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재 교과에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건전한 생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과목에, 정규 교과로 포함시킬 작정입니다.

○**이용경 의원**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10년, 20년 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장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개발 활동은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정부의 기술개발 계획은 민간기업의 계획과는 달라야 됩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와 원천기술 R&D를 정부가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감입니다.

○**이용경 의원** 또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투자보다 개인과 소규모 연구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의합니다.

○**이용경 의원** 원천 핵심기술 확보는 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요즘은 병력의 숫자보다 기술력이 국방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개방화·세계화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경제적·주권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방에서도 많은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무력 대결이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본 의원은 기초기술 연구를 국방기술 연구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본질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방 연구가 그동안에 응용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기초원천 연구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핵심기술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국방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서 국민 모두가 열광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라커룸에 들렀을 때 저는 미래 꿈나무들의 영웅인 축구선수들이 군대에 가지 않게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언행과 안위는 국민 의식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스포츠·문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군대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해서 물의가 좀 빚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가 체육과 예술을 진흥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좀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 분야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그 다음에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까지만 병역 혜택을 주는 걸로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술계 분야는 저희들이 음악하고 무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회 1등, 국제 대회 1·2·3등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흥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진흥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나라의 어린이에게 잘못된 교육이 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저작권을 강화하라고 하면 외국 기업에게 돈 벌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초기에 저희들이 외국의 기술을 모방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국제 면허를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과거를 보면 사실 저작권이 보호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이 점을 알면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국회 정기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책도 쓰고 해서, 사실은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 지금 있습니다. 마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지적인 자산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 진출하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지적 소유권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경 의원** 저작권에 관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또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소비자의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관련 산업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도 인식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미국은 저작권보호청의 직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문광부에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22명뿐이고, 그중 저작권에 대해 전공한 직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문광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미국처럼 대통령 산하의 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지금 건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미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결론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결론에 대해서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용경 의원**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절차를 미리 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워포인트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교롭게도 미국 FCC에서도 최근 신·방 겸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에 걸쳐 연구하고 공청회를 열고 또 치밀하게, 공정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본 의원이 정책보고서도 만들어서 의원실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이걸 한번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용경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인 교육·과학·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 분명 우리나라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가 IMF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부동산과 건설 시장 부양책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는 10년 전 그때 우리는 IT를 발전시키고 벤처시대를 열어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나라의 미래를 여는 새 도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이용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목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IMF 위기 극복의 경험으로 이미 체질 개선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의 경제 위기를 머지않아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는 항상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위기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습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0년 전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한 이후에도 서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커졌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서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짚고 대책을 촉구하는데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도표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냅니다.

IMF 시절 최고점인 1999년 13.1%였던 빈곤율은 노무현정부 시절 꾸준한 상승을 지속하다가 2007년에는 15.6%로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제 위기는 극복했지만 빈곤율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득, 산업, 고용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희목 의원 그런데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 차이가 1999년 5.7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에는 14.5배로 높아져서 노무현정부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계화·정보화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투자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일부 소득격차 완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해 왔던 복지정책은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쓴 투자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9년에 7056명에서 2007년에는 1만 2174명으로 많아졌습니다. 또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빈곤이 서민들을 자살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체계가 제대로 되었다라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까지 가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IMF 때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도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빈곤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더욱 악화된 빈곤 문제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소외계층의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 이후에 서민들의 빈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지난 정권 IMF 시절 이후에서 보여준 것처럼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세계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서 아마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하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실업 대책,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의 확대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요건을 완화해서 1만 명 정도가 더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다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이분들 중에 소득이 낮은 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까지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지금 21만 명 정도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47만 명까지 늘려서 하위소득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행하기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에는 금년에는 3만 2000명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

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서, 제가 인원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9000명 정도를 늘려서 18만 10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내년이면 전체 어른들 가운데 한 63만 명이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병도 걸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한 30% 정도로 확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원희목 의원 경제적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현재까지 5만 8000명 정도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원희목 의원 장관께서는 취학 연령기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취입 이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몇 차례 학교 현장을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5만 8000명 중에 절반인 2만 5000명 정도가 취학 연령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4분의 1인 60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를 올라갈수록,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인데요, 고등학교의 경우 무려 70%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통계를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보고도 받고 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러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장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그 통계에 대해서 통계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로서도 앞으로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중간에 탈락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2세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원희목 의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취학 연령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2만 5000명 중에서 한 1만 9000명 정도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속적인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육의 문제는 어떤 이벤트성이나 단발성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자녀를 자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원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광부 복지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여기에 관해서 2012년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7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희목 의원** 아까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고 신뢰할만 한 통계나 자료조차 찾아보지

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

다문화가정 취학 연령대 자녀 2만 5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수조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의합니다.

○**원희목 의원**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조사는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는 물론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또 공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라서 그 대책도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꼭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0% 이상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 폭력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녀교육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 그렇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래서 그 실태와 그리고 여성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 지난해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가정이 약 40%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폭력,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여성부에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화를 개설하고 8개국어로 22명의 상담원이 적극적인 상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상담내용 중에는 법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또 상

담지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귀국조치를 해야 할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이주여성,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65일 24시간 8개국어로 하고 있는 그 상담원들은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2년이나 3년 정도 머문 이주여성들을 상담훈련을 시켜서 상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접근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건수도 보면 매년 증가해서 2006년에 350건이던 것이 1200건,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귀가 조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쉼터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는데요, 다문화가정 교육 문제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원희목 의원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또 행정안전부, 여성부, 법무부 같은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종합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 간 조율과 강력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이 만약에 나쁜 역할이 된다면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원희목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4만 4000여 다문화가족이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가정에 6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히 이 수가 늘어날 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잘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회의 중요한 반목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

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산하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선 각 부처를 총괄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가는 한편 총리 자신도 여러 번 이미 다문화가족센터에도, 광주에도 가고 남동공단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취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1세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2세대, 그 자녀들의 문제가 향후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가일층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3대 필수요소인데요, 옷이 만약에 지저분하면 세탁하면 되고 집안이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환기를 하면 되는데 음식만큼은 일단 목으로 넘어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과 마찬가지로,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약품 섭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의약품은 미국의 FDA처럼 집약적·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미국의 FDA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주어진 여건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FDA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최근 10년간 수입식품은 4배 이상 증가했는데 관리 인력은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해외 현지생산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도

없습니다. 단지 수입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완제품 검사에만 의존합니다. 이번의 멜라민 사태도 여기랑 기인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위해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이 취약합니다. 현재 식약청 해외 주재관은 중국에 파견된 1명뿐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원희목 의원 해외 정보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번의 멜라민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대처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식품사고, 특히 중국 수입식품이지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와 같은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우리 경제 수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미국하고 다르게 사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혹시나 식품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만일 FDA처럼 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행정 여건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체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관여는 하고 있지만 중국적으로는 총리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하여튼 식품안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원희목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약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약산업은 IT와 BT가 결합된 첨단산업입니다. 우리나라 IT·BT산업은 세계적 수준이고요, 그리고 의료임상 수준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산업보다도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확실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적인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국내 제약산업은 우선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FTA 후속대책 일환으로 아시다시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고, 향후 10년 동안에 제도를 선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또 제약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제약 업계가 협력해서 우리나라 제약업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제약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약산업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이와 같은 실험기간도 많이 거쳐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규모의 제약회사가 이와 같이 큰 회사가 되기는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제약 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이와 같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일부 제약사는 그런데 신약의 기초가 되는 신물질을 개발하고도 다국적 제약사에 헐값에 팔고 맙니다. 신약 개발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신약 개발에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일개 제약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바이오테크 쪽에도 그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드랙(lead lag)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연구해서 제품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단계도 많이 거쳐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만일 성공한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그 규모까지 가지 못해서 대개 중간 단계에서 기술을 다 미국 제약회사나 스위스 제약회사에 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약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산

업이고요,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고용 있는 성장 산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제네릭 시장의 수출기지로 정해졌고 일본은 다케다 기업을 해외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수출 주력 제약사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내 제약 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희목 의원 일단 시작을 해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원희목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우선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확보된 뒤에는 실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생명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약 회사, 제약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희목 의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총리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서 은행채를 매입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원희목 의원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복지부장관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맞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런데 복지부와 사전 상의 없는 국민연금 투자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국민연금이 현재 저가인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실상 국민연금 주식 떠받치기를 종용했다고 비판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소신 있게 투자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도 그 소신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배제된 채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의 계속되는 국민연금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부처의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부처의 장관도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과 같이 경기가 나쁘고 주식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기금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또 경기 활황기에는 이것을 오히려 원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겠지만 이와 같은 기관투자가의 투자 프로세스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국민연금의 성격상 이것은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외된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발표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적인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준비했던 질문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

과 일문일답 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서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재검토 건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규제완화 정책의 재검토라기보다는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또 열악한 지방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강력한 지역발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목 의원 그런 뜻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원희목 의원 아까는 제가 조금 다르게 들어서,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과 시장친화적인 경제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시장 속에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의료 분야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안전망으로 봐야 합니다. 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리와 지원이 강화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원희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전병헌 의원 소개로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민 150인이, 그리고 조전혁 의원 소개로 인천 남동구를 지역구민 4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 대표로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후보의 지명을 지켜본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대통령 제44대 대통령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찬겨울과 함께 실물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지만 없는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총리도 물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전병헌 의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세금은 깎아 준다고 하면서 없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316억 전액을 삭감하는 등 모두 128개 사업,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업을 7000억 이상 삭감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차가운 정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계절의 한파, 경제의 한파 이런 이중 한파에 떠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민의 담요를 빼고 방에서 불까지 빼려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는 최근에 새벽 인력시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전병헌 의원 제가 며칠 전 우리 동작구 관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의 실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일자리의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추석 전과 비교해서 일자리는 20% 이상이 줄었고 가사도우미 일조차도 40% 이상이 줄었다는 비명과 아우성과 한탄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는데 금년도의 국민소득을 총리께서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2만 불?

○전병헌 의원 2만 불이었는데,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2만 불.

○전병헌 의원 예, 금년도 국민소득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환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전병헌 의원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4% 예상하고요, 어저께 환율 1284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5010달러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10개월 만에 우리 국민소득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달러 표시로 그렇고요, 실질구매력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전병헌 의원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2만 불에서 1만 5000불로 적어진 숫자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매력은 마찬가지로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 총액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1년 전에 시가총액이 1029조 원에서 534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물가상승률과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사 부도도 50%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25%가 늘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도 IMF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서민용 음식인 라면과 김밥, 소주뿐입니다. 서민들은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소주로 시린 가슴을 달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민들에게 현재의 국면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국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사실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것의 여파

로 각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헌 의원 위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 위기지요, 물론.

○전병헌 의원 위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전병헌 의원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값이 배 이상 뛰었고 또 최근에는 지난 100년 만에 처음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금융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가 국제 금융 위기 또 이런 것이 국제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전병헌 의원 완전히 외부 세계경제의 탓이라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총리는 10년 전 IMF 위기 때 우리 국민 350만 명이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22억 달러를 모금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럼요.

○전병헌 의원 최근에 여당 대표가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하고 이벤트도 벌였는데 국민들은 참으로 비웃음과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왜 10년 전과 오늘날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10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100억 달러가 안 되고 한 36억 달러인가 정도 됐고 지금 외화는 사실은 국제 금융 위기만 없었다고 그러면 통화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한 달 전까지는 약 2400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은 사실은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IMF 위기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저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결집과 통합된 힘이 필요한데 국민의 힘이 모아지지 않고 통합된 힘이 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위기의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위기의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다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세계경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 이명박 정부의 국민 분열정책,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7%가 넘습니다. 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답한 국민이 55%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경제 위기 극복에 재정정책이 대단히 유효한 수단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따라서 예산 편성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없습니다.

○전병헌 의원 없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전병헌 의원 그런데 왜 지난 10월 27일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출을 늘려 달라고 국회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내버려 뒀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서 27일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상황이 급박해 가지고 국제 금융 위기 이것이 국제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뭔가 경기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해서 경기부양정책의 일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국회에만 맡기는 것은 옳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짧은 기간이었으나 일주일 안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짜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또 제출이 될 것입니다.

○전병헌 의원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황기에 있어서 총리께서 시인했듯이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인 예산 편성에 경제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예산을 짠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야당 대표께서 지난 10월 초에 이미 정부 측에 경제 위기 현실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둔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게 증액을 요청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경예산도 짰었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원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갑자기 오는 과정에서 다시 예산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7일 이 자리에서 국회에게,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것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가능한 한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사과를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사과를 해야 된다면 사과를 하겠습니까마는……
 ○**전병헌 의원** 사과를 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사과를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사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첫째 경제 위기상황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둘째 야당 대표가 이미 수정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달 동안 묵살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이 자리에서 국회더러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헌법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게 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병헌 의원**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예산을 보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일단 발표한 뒤에는 상황이 변하면 그때마다 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 정책을 바꾸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병헌 의원** 둔감한 경제 운영,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일이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못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오히려 둔감한 것이 아니라 보정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면을 보여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병헌 의원** 야당 대표가 한 달 전에 이미 수정예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수정예산을 부랴부랴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기민한 일입니까, 둔감한 일이지?
 ○**국무총리 한승수** 야당 대표께서 이와 같이 충고해 주고 또 조언해 주신 것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총리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총리 같습니다. 정부, 대통령, 총리, 다 신이 아닌 이상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재빠르게 수정해서 재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오만이고 잘못된 자존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둡니다.

국민 단합과 결집이 위기 극복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입니다.

○**전병헌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킵니까? 좌우 이념 잣대로 좌파다 우파다, 교과서 베스트셀러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좌파우파 딱지를 붙이고 있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면서 국토균형발전 포기해서 지방과 중앙 갈등·분열 획책하고, 인사정책은 5개 권력 사정기관을 모두 특정 지역 인사로 다 채워서 이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대단히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교과서 수정 때문에 아마 좌편향 우편향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오전 중에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 역사교과서 수정은 좌편향에서 우편향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의식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만큼 정치·경제 분야에서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역사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교과서 수정하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전병헌 의원** 그 이념적 잣대가 이미 50년 전에 종언을 고한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지극히 구닥다리적 관점을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계시군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 왜 그렇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50년……

○**전병헌 의원** 제가 총리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지만 총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요.

○**전병헌 의원** 아니, 좌우의 대립이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이미 종언을 고했고 소련

은 망해서 러시아로 변했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개방경제체제로 이미 나간 지 오래되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인데, 세상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좌파 우파 이렇게 가리는 것이 제대로 된 상태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에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게 아니지요……

(장내 소란)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올바르게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않은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헌 의원 교과서 저자들이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모든……

○전병헌 의원 또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할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쳐야지요.

(「교과서 읽어 봤어요, 총리?」 하는 의원 있음)

나는 읽어 봤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사서 읽어 봤습니다.

○전병헌 의원 참으로 구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는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편향 정책을 12개 한자로 표현하면 비영부족(非嶺不足)—영남 출신이 아니면 발 내밀지 말고, 비남부수(非南不手)—강남에 살지 않으면 손내밀지 말고, 비소부면(非所不面)—소망교회 다니지 않으면 얼굴 내밀지 말라라는 식의 인사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기적처럼 유지되어 왔던 종교 평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일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자랑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세금폭탄이니 징벌과세니 운운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시켜서 이른바 자본주의사회의 미덕이고 기초질서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빅5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편중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기본원칙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과거에 또 지역에 상관없이 기용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5대 사정기관의 경우에 두 분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고, 또 한 분은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학교, 특정 종교 때문에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제도 참 좋은 글이,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께서 고소영이라는 말 이젠 거들 때다 그랬는데 고려대학 출신이나 소망교회 출신이 지금 들밖에 없습니다, 내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각이나 인사가 다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5월 22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전병헌 의원 그리고 6월 19일 또 한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두 차례의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모차 엄마까지 마구 잡아들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정말 진심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과를 진솔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9일의 담화라든가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믿어 주시지 않고 진실이 안 담겼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대단히 서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시다,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 끼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이것을 순수하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받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의원** 대통령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게 공안 탄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해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수사 활동의 공익성과 비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참여연대, 녹색병원, 일부 대학가를 사복 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과도하게 경찰력을 집중하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경제 파탄에 이어서 민생치안마저 구멍을 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불법 과격시위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록 야당에 몹은 담고 계시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의 입장에서 봐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와 같이 불법적인 시위도 그러면 용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부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참 이렇게 협력을 계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일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시위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께서 좀 나서서 가지고 국민들을 좀 말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서 쇠고기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렇다면 국민 통합과 대승적 차원에서 촛불시위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를 총리께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촛불시위가 5월 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계속 시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5월 24일을 고비로 해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가 과격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점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과격한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배 중에 있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은 불법 시위를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수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처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모양인데,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촛불시위의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촛불시위가 초기에는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 식품으로부터 오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그것은 수긍이 충분히 됩니다.

○**전병헌 의원** 따라서 촛불시위 수배자들에 대한 대승적 차원, 국민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배 해제를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총리께 요청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제엠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아직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오늘 아침에 인권위의 사무총장이 K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2주 안에 될 텐데 아마 그 내용 중에 일부 공권력에 대해서만 평한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총장은 그 안에는 과격 시위자들에 관한 것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알겠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발표 내용 가운데 과격 시위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왜곡되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전병헌 의원** 총리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명 칼날 방패라는 것입니다, 칼날 방패. 이렇게 칼날 방패를 갈아서 시위자들을 진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 자리에 나와서 불법 시위나 시위하는 사람들하고 대결하고 있는 전경들은 다 우리들의 동생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경찰관

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자제하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시위가 하루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헌 의원 폭력 시위자들에 대응할 때도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 공권력이 눈에 눈, 이에 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슨 공권력이고 정의와 책임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경찰은 평화적인 준법 시위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지원을 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폭력 시위에 관해서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그러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병헌 의원 아직도 YTN 사태가 단순한 민간기업 차원의 노사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YTN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법에 의한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을 했고 사장이 지금 YTN 사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YTN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보도 채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YTN 사태입니다. YTN 주주총회가 30초 만에 날치기로 구분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YTN 사태는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장관은 나설 능력도 또 함량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가 나서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나서서 구분홍 대통령특보에게 사퇴를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YTN 사태를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YTN은 상장된 주식회사이고 상법과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YTN 노사분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노사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YTN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광주사태를 훗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로 잡았듯이 YTN 사태라는 명칭 대신 YTN 공정방송 사수운동으로 부를 것을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합니다.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병헌 의원 그렇다면 총체적 부실 정부, 무능 내각의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의 해임 건의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총리의 마지막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저를 비롯한 내각은 오늘이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개편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병헌 의원 헌법 제87조에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한번 총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그러나 대통령께서 내각을 갈지 않으시고 다시 좀더 힘을 내서 일하라 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준비한 절의 자료를 한 절반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탈규제, 감세, 통화주의,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었던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의 등장은 결코 이와 무관하

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대공황이 케인지안(Keynesian) 시대를 열어 극복했다면, 지금의 세계적 경제 위기와 오바마의 등장은 신케인지안 시대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세계의 주류였던 신자유주의정책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 온 또 다른 중대 위기의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노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세계가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과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끝물에, 아무도 타지 않는 막차를 타고, 소중한 대한민국호를 미국의 실패한 과거 속으로 역주행시키겠다고 하는 오만과 집착이 금번의 위기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의 탄생이 가져올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만과 무지로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놓쳤던 권력층 때문에 낙후되었던 뼈아픈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별도로 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1인당 15분입니다. 15분 제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야 될 부분 또는 분명히 남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장에게 요청하면 전문을, 원하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경제학자가 그렇게 교육에 열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 변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1992년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의 게리 베커 교

수입니다. 게리 베커 교수는 현대 국가의 경우 정부의 무려 4분의 3이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나아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 변수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사회계층의 수직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도 내 자식은 좋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저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역사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개인, 성공한 조직, 성공한 사회 그리고 성공한 국가 뒤에는 반드시 성공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나친 획일적 획일주의, 국가 통제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관료화되었고 교사는 관료화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는 무한히 경쟁하는데도 학교·교사는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학교·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경쟁의 부담을 같이 져야 합니다.

다변화된 경제·사회·문화 구조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실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교를 관료적 통제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이러한 기회와 평등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교육 격차는 계층 격차를 부릅니다. 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교육 재원의 많은 부분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효율과 형평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만큼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또 죽어 있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효율적이고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제 모두연설에 동의를 다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전혁 의원 제가 모두연설한 부분에 동의를 다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전혁 의원 저는 교육은 국정의 일부가 아니고 국정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전혁 의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교육제도 폐지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6%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조전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의 성장을 인적자원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많이 가 보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좀 가 봤습니다.

○조전혁 의원 거기에 보면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좌파·우파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영국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전혁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 가서나 저는 확실한 우파라고 밝히고 저는 우파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우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국민을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분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파·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경

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 보면 노동당하고 보수당은 완전히 이념이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때에 따라서 노동당, 때에 따라서 보수당을 선호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됐고 우리로서도 이와 같은 정치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원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저도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이 확실히 ‘나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identify)하고 그렇게 하면 논쟁이 좀더 실질적인 논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학자들 가운데는 비교적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우리 식품 안전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전혁 의원 특히 학교 앞 문구점이나 잡화상에 보면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행성 오락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출처 불명의 괴담집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권이 교육과학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총리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하여튼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실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실에는 사회통합실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적불명의 이와 같은 비위생적 불량식품이라든가 멜라민 같이 국적이 확실히 있는데도 이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보건복지가 즉부하고 농수산식품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초기에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멜라민 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저는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청도 같이 동참을 하고 역시 또 학생 안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학부모가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경찰, 학부모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댐라민 사태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언제든지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뿐이고 또 과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상시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물겠습니다.

교육정보공개법이 내년부터 발효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내년부터라기보다 시행령을 지난 화요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조전혁 의원** 장관께서는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특정해서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첫 번째는 교육 분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교육의 질, 그것을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전혁 의원**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시행령 안에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알찬 정보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이 교육정보 공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할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조전혁 의원** 물론 스타트를 하는 측면에서 그

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 불충분하다는 게 제 소회입니다.

외국에서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참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도 우리 존경하는 조전혁 의원하고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교육 공시는, 정보 공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예도 좀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외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도 쓰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의원** 그 애뉴얼 리포트에 따르면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고 그것도 학생들을 5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1등급 아이들은 얼마만큼 올라갔고 또 처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됐고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 폭력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됐고 하는 그 과정까지 다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장관님, 내년도 정보에는 그 수준까지 공개되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우리는 5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 개개인이라기보다 학교 단위로 해서 공개하는 것이, 이제 입법 과정을 보면 2011년도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단계로 직접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고 매년 어떻게 그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고를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교원노조 가입 현황은 지금 숫자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실명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어떤 선생님이 지금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게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명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교사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조전혁 의원**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 교과부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아주 많이 계십니다.

○**조전혁 의원** 그 변호사들하고 제 변호사들하고 한번 공청을 해 보실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변호사 공청회는 한번……

○**조전혁 의원** 법률 디베이트(debate)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 변호사 분들은 지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 단계에서 개개인의 이름을 대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아니면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아마 우리 조 의원께서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조전혁 의원** 저는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 60% 이상 되는 학부모들이 실명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노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일반 노동조합입니까? 그냥 노동조합입니까?

○**조전혁 의원** 교원 노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일반 노동조합이 됐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목적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그 협약 체결한 안을 보면 그 목적에 지금 충실하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지금 교육 감독당국이라든가 교육 당국의 교육 정책권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교육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침해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그래서 이런 침해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학부모 단체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교원 노동조합의 성격은 일반 조합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보겠지만 교원노조는 교원이 갖는 가치 또 공익적인 성격 그것 때문에 그냥 사익단체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공익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성격을……

○**조전혁 의원** 교원 노동조합 중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전교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의원** 전교조가 여태까지 그렇게 공익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까?

정부의 공익적인 정책에 대해서 협조적이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반드시 정부에 협조적이어야만 공익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역사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원래 전교조가 출발할 때는 상당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전혁 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직 제가 전교조 대표들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조전혁 의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공익적인 단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장관 개인의 의견보다는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썽, 국민 전체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공익적인 면이 아주 약하다, 사익적인 면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지금 거대한 정치 이익단체가 됐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그런데 그런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또는 교육청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오십억 이상 지난 4년간 지원을 했고 프로젝트별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타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앞으로는, 우선 전교조가 직접 관련된 곳이 시도 교육청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가 그동안에 맺었던 여러 가지 약정, 이것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원래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육감의 임용권이라든지 학교장의 경영권 이런 것은 사실 노조가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전혁 의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 감사를 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사실은 단체협약을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감사 때마다 혹시 불법적인 협약 체결이 없는지 반드시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아까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급식비 미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영어교육 지원이 시급하냐, 아니면 급식비 지원이 시급하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급식비 지원이 시급합니까?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급식비하고 노조……

○**조전혁 의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뭐 노조의 활동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전혁 의원** 노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재정적인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물론 지금 화급한 것이 급식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전혁 의원** 돈을 지원하는 데도 선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조에 지원하는 돈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급식 못 하는 우리 아이들 급식부터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학교 안에서,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성적 학대가 발생해도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문제를 덮으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의 충격적인 집단 성폭력 사건 기억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그것도 시교육청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섯 달간 방치해 가지고 문제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장관께서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전혁 의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런 아동이 있는 기관에서 학대가 일어날 경우에 즉시 수사관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학교에서 법을 어긴 겁니다. 쉬쉬하고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또는 학교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전혁 의원** 게다가 처벌 수준도 굉장히 솜방망이입니다.

혹시 저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오줌을 옷에 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사가 아이를 불러내 가지고 세 시간씩 교실 앞에 서 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벌 수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것 명백한 아동학대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습니다.

○**조전혁 의원** 그때 어떻게 처벌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경고에 그쳤습니다, 경고에.

이런 식으로 온정주의로 해 가지고 사실은 교사를 감싸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용률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성폭력을 한 교사가 중징계 받았다가 거기 소청심사위원회 거치면 감봉 3개월, 정직 1개월 이런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것 구조적으로 좀 고쳐야 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동의합니다.

○**조전혁 의원** 교원의 징계 관련 정보, 특히 중요한 것들은 좀 공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공개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검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혹시 지난 국감 때 제가 장관께 질의한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장기휴직 문제, 제가 언급을 한 적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장관께서는 '4·5년 휴직해서 돌아와도 학생들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제 주위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것은 장관님의 상황 인식이 너무 틀렸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대학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 지금 대학하고 초·중·고등학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

○**조전혁 의원** 그러면 장기휴직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휴직한 뒤에 일정한 학교 적응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연수도 받고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전혁 의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질병이나 연수 외 사유로 교사가 1년 이상 휴직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조전혁 의원** 별로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1년 이상 장기휴직하는 것 앞으로 원칙적으로 좀 금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원노조의 전임자 전임기간 그것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전혁 의원** 2년 정도는 허용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재 전임자는 5년 이내에 허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전혁 의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법을 갖다 고치든지 해야 되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전혁 의원** 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직업노동운동가가 먼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교사가 먼저지요, 당연히.

○**조전혁 의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것은 규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조전혁 의원** 제가 시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

내겠습니다.

.....
○부의장 이윤성 조전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정족수가 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82명이 안에 계시고 열두 분이 지금 휴게실에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 빈자리가 아주 크게 보이니까 밖에 계신 분들,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英姬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다수의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위해식품, 고용 불안, 물가고, 교육비 증가, 가계부채 등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과 민생의 늪에서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희망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어머니의 한 사람으로서 새삼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신뢰의 상실과 리더십의 결여 그리고 법치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불공단 전봇대 뽕듯이 명료하고 신속한 판단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신뢰사회를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시간이 가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는 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丁英姬 議員 정부 내 식품 관리 일원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은 국가 안보 차원과 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정부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보듯이 위해식품에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위해식품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엇그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식품에의 이물질 혼입 방지 방안이라든가 유해물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으로써 식품 안전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정부에는 식품을 관리하는 부처가 몇 부서나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주로 식품 안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농수산식품부가 주로.....

○丁英姬 議員 아니, 몇 부서나 되느냐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부처는 두 군데입니다마는.....

○丁英姬 議員 그게 아니고 식품을 관리하는 그 부서요.

○국무총리 한승수 식품을 관리하는 부서.....

○丁英姬 議員 아홉 부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다 보니까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4500만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금년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지금 여러 부처가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식품안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안전 체계 일원화 문제는 행정 여건

이라든가 정부조직 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식품 관리 일원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 내 대책기구 설치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 합동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경기도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 분담금을 받지 못해서 김포 한강신도시 22개 학교와 수원 광교신도시 14개 학교의 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1조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분담금을 도 교육청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분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도 같은 문제로 오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정영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매입비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반반씩, 2분의 1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라든가 또 수도권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가 아주 급격히 증대하는 곳에서는 학교 시설 조달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 이와 같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약 2000세대 이상이 있는 공영개발 시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2000세대 미만은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20%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법을, 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오면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다음 원자력청 신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는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丁英姬 議員** 그러므로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국가위기관리 원자력과학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정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원자력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종합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관, 지자체 그리고 소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국가의 위상은 물론 국가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원자력은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전략적 비중이 큰 분야입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원자력청이 1만 5000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70명 정도로 내일의 원자력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원자력청을 설치하여 원자력을 총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정영희 의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는 원전을 59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기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는 농축이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국방 R&D까지 여기서 하고 있고 재처리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원자력 시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민감한 시설이 없고 원

전 20기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력 활용의 규모가 커진다는가 또 원자력의 다른 수요가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직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지금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은 1700만 원 정도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의 초봉은 14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로시간도 주 평균 52시간으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2008년 하반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약 10만 개소에 26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임 평균 연봉은 1727만 원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초임 1956만 원에 비해서 약 90%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머지않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 중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시설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성과급 지원을 통한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해서 내년에 한 1540명에게는 종사자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추가로 더 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丁英姬 議員**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방안을 2009년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방안 마련에만 1년 이상,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립니까?

이렇듯 계획 수립에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은 사실 내려갈 때부터 내려가는 것보다 안 내려가는 게 좋다, 내려가는 것이 좋다 하고 많은 이견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의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금년 10월 30일 날 지자체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2009년 말에 폐지되기 때문에 정부 현재의 입장에서는 2009년까지는 일단 1조 1000억의 지방재정 확대를 통하여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0년 이후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丁英姬 議員** 뒤에서 이렇게 희생적이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국가보조금의 편취와 횡령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과 제도의 허술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법과 제도의 허술함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자의 선정, 집행 상황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신축사업자 선정할 때 그냥 요양시설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계약은 가능한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계약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제로 거래 업소와 크로스 체크 등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의 조사 인력이 한 20여 명입니다. 이것을 한 250여 명으로 확대해서 1000여 개 기관에 대한 실사를 해서 낱알이 그 문제점을 파헤치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관리와 심사 절차 등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거든요.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바로 지금 그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丁英姬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작권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만 9000건에서 2008년 현재 8월까지 5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丁英姬 議員** 범법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 문제는 지금까지 아직 저작권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나름대로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출범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고 저작권으로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는 교육과 또는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청소년에게는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기소유예제를 지금 시행을, 서울 지역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청소년이 저작권으로 인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丁英姬 議員** 정부는 저작권 보호 사업에만 머물지 말고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모든 국민이 적

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콘텐츠 쪽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장르 간의 융합을 통한 뉴미디어 또는 게임산업 또는 100년 감동을 줄 수 있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개발하자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작활동에 좀더 많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창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아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완성보증보험제도라든지 또는 수출보증보험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활용될 수 있는, 원 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또는 해외에 저희 콘텐츠를 확실하게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전략 이러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내년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丁英姬 議員** 습지 보전에 대해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창원에서 열린 환경올림픽 제10차 램사르 총회가 어제 막을 내렸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丁英姬 議員** 램사르 습지로 등록된 것은 보전의 가능성이 크겠지만 작은 규모의 이름 없는 습지들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매립과 훼손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규모가 작고 이름 없는 습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램사르 총회와 습지 보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영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습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고 개발과

현대화의 과정에서 희생되기 쉽지만 소중히 보전해야 될 자원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화해 가는 길목에서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번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크게 확충된 데 대해서 매우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습지에 대해서는 매년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습지로서의 질이 우수한 것은 습지보전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름 없는 작은 습지들이 이제는 국민의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애호받고, 그렇게 되면 개발과 건설에 희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희망을 갖습니다.

저희들의 꿈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국토관리체계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하게 습지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개 습지의 중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그 습지가 우리 선진화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또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가 첫 번째로 꼽혔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丁英姬 議員** 장관께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홍보 및 계몽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민들의 의식을 환경 보전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연도별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영희 의원님이 역시 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물류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남은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느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식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생

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음식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이 희박해져 가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2002년 이후 1년에 4개~6개 사이의 시민단체 내지는 NGO들과 협력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극소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스미디어 쪽에서도 너무 일반화된 주제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번 조사 결과 투영된 '무엇 때문에 음식물이 남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실천될 수 있고, 업소에서 실천될 수 있고 그리고 학교나 조직 시스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자체·사회단체·여성단체 그리고 학생 등과 관련된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등과 협조해서 이제는 좀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환경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상별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해 낼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자료를 점차 확대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丁英姬 議員** 국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과 청소년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의 한국이자 희망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의 부패의식에 대해 교육과 학기기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수가 10점 만점 기준으로 6점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17%는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 가도 좋다, 24%는 나를 더 잘 살게 해 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 또 35%의 청소년은 숙제를 할 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짜깁기해서라도 꼭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丁英姬 議員** 또 반부패 교육을 받은 적이 있

느냐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87%가 교육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년의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존경하는 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지적체 교육을 죽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쪽, 인성교육 쪽으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교육하는 데 있어 그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좀더 강조하도록 그런 쪽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에 본 의원이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의 발생 원인이 대학교 입시제도 특히 수능과 대학 입학시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시험의 기준과 출제 범위가 무제한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배우게 하려고 더욱더 사교육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丁英姬 議員**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허허벌판을 뛰어다녀서 아니고 축구장이라는 제한된 경기장 안에서 뛰기 때문입니다. 수험생과 가족에게도 축구 코트 그리듯이 출제 범위와 기준을 그려 주고 그 안에서 뛰도록 다음과 같이 해 주면 됩니다.

첫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둘째, EBS에서 강의하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셋째, 국가가 제공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라는 3개 원칙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丁英姬 議員** 그동안 장관께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검토해 봤습니다.

수능시험 문제 출제가 교과과정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과정 내에서도 그 문제를 응용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과정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시험 볼 때 우선 제가 그 출제위원들을 전부 만났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 점을 분명히 강조했었습니다.

EBS 강의 내 출제, 이것도 조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2008년도 대학수능시험 9월 모의평가, 9월에 모의평가를 봤지요, 평가시험입니다. 이것과 EBS 강의를 얼마나 연계, 관련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언어영역이 84%, 수리영역 '가'형이 70%, '나'형이 76%, 외국어영역이 76% 상당히 높은 연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도 더욱더 교과과정 내에서의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 대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걸 지도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고2, 3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좋은 시험의 출제 자료로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개혁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공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현 정부는 대학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丁英姬 議員** 그런데 대학혁신추진단이 아닌 공교육혁신추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공교육혁신추진단이 좀더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이와 병행하여 사교육혁신추진단도 설치해서 쌍두마차 체제로 국가교육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사교육혁신추진단 설치를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추진단이라는 이름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기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조직을 줄이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 조직 내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국가 발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정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 의원이 질문하는 동안에 방청석에는 정 의원의 소개로 친박연대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들이 방청하셨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경기 구리시 출신의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문화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또한 법과 질서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괜찮습니다.

○**주광덕 의원** YTN 구본홍 사장 임명절차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없습니다.

○**주광덕 의원**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광덕 의원** 그러면 YTN 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잘못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사고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정부로서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의원** 예.

금년 9월 2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8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180개 국가 중에 40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나 교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고한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의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19세 이상 3000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가 넘는 국민들은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켜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술선수범을 해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키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법치주의 확립에는 위와 아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들이 술선수범해서 법 준수 풍토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건국 이후 지난 60년 동안 법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벌 등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수사 중 사건이 무마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사면을 시켜주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특혜 내지 선심성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본 우리 일반 국민들, 법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과도하게 빈번한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주의 확립에 사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15일에 경제 살리기 동참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사면을 발표하시면서 임기 내에 불법을 저지른 데에 대해선 더 이상 사면이 없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광덕 의원**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법의 집행에 있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나 술선수범해야 할 지도층들의 각성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의원**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범법자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를 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법 집행이 엄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주광덕 의원** 최근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도주한 촛불시위 수배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불법 수배자들의 조계사 이탈 사건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7명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지금 검거전담반을 구성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검거를 하기 시작한 줄 압니다. 이 검거가 이루어지면 관련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여부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것도 분명히 해야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광덕 의원** 총리께서는 이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국가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수치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광덕 의원** 독일의 람스도르프 교수는 부패 인식지수가 1점이 올라가면 GDP는 0.5% 그리고 우리의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연간 GDP의 1%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연간 약 6조 2300억 원의 외국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질서 준수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님,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주광덕 의원**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취임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작년 6월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그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 하게 한다’든가 ‘우리나라 선거법은 위헌이며 위선적인 제도다’라고 말한 바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한 발언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서 우리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에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시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법 중시 풍토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시지요.

아홉 번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정치인, 법원의 영장심사 절차에 불응한 채 농성에 들어간 정치인, 그런 행동 역시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

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사상들을, 생각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정치인이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님,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광덕 의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3%로 상향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광덕 의원**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1.6%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각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평균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총리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 정부 부처 안에서 이것을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처가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구분 모집을 강화하거나 해서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09년에 3% 달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공공기관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장애인들을 좀더 채용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본 의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역시 법을 준수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주광덕 의원** 우리나라 여성들은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는 등 남성들보다도 국제경쟁력을 더 인정받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리고 올해 판사에 임용되는 여성 비율이 70% 정도에 이르는 등 여성의 공직사

회 진출이 급증하고 있고, 여러 전문분야에서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능력도 우수하고 여성 공직자 대부분이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1988년에 비해서 국회에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광덕 의원** 그런데 우리 행안부나 문화재청, 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경우를 보니까 여성의 참여비율이 15%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총리께서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조계나 행정부 일반행정, 외교 할 것 없이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공직에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여성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금년 8월 15일 불법시위 혐의로 마포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피의자에 대한 속의, 소위 말하면 브래지어 탈의 조치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인권위에 제소되기도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주광덕 의원**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자체 업무편람을 근거 규정으로 해서 입감되는 여성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를 취했던 것은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주광덕 의원** 장관님, 경찰서 유치장을 제외하고 검찰청 내의 수용시설이나 구치소, 교도소, 심지어 감호소나 치료감호소에조차 수감되는 여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이번에 질문이 계속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광덕 의원** 아, 본 의원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주광덕 의원**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걸……

그와 같은 수용시설에서 속옷이나 겹옷, 이불 등을 찢어서 만든 끈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브래지어를 이용해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죽 보니까 신체검사라든가 위험물 제출 등 유치장 내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고, 저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나 인권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고려해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여성의 브래지어 탈의 중단시킬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치인의, 그간에는 생명, 뭐 신체 안전과 연관된 사안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경찰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다른 수용시설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만일 필요성을 느낀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두고 또 탈의된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 대응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수감되는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저도 공감합니다.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법 집행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사회지도층 인

사 간의 불평등과 차별 이제 없어져야 하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리고 반드시 없애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법치주의는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어제 검찰총장님께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고 증권가의 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근거 없는 악성루머를 퍼뜨려 기업과 국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주광덕 의원** 수개월 전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해 왔던 검찰로서는 시기적으로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아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시대착오적 발상 아니냐는 어떤 오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비취 불 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제가 처음 그 필요성을 주장해서 지금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관한 법안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실현이 되어서 사이버사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신설하는 게 적절하다,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좀 예민한 문제인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돈을 줬던 상대방한테 ‘차용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것이 압수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님, 그것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듣고는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주광덕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령 당선 이후인 작년 12월 말일 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시켜 줬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광덕 의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 부당하고 부적절한 사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사면은 최대한 신중하게……

○**주광덕 의원** 아니, 4일 만에 사면하는 것.

○**법무부장관 김경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이번 8·15 사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좀 숨방망이 처벌을 받은 다수의 재벌들이 사면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일부 후퇴시켰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계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심각한 경제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8·15 사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경제인뿐만 아니고 일반 소외계층 서민들도 같이 여러 사람 사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의원** 장관님,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주되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범, 재벌의 비자금 조성행위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면은 실시하지 않겠다.’ 이런 대통령의 약속, 꼭 지켜지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사면권 행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최근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해당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서는 ‘표적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하면서 정치공세를 펴고 있고 심지어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구속기준 마련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보다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구속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포함합니다.

다만 천태만상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도, 검찰도 또 재야 법조계도 또 학계도 만족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로서는 구속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의원** 97년도부터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만 5000명의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게는 단 1명도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재벌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서는 단지 9명에 대해서만 부과가 됐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특히 재벌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보면, 1심에서 실형 받은 재벌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줄 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을 부과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면제해 주고 그 대용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봉사명령도 유전무죄(有錢無罪)나, 이런 국민의 비난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법원의 그와 같은 잘못된 제도 운용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나 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소를 한다든지 기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장관님,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을 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리사는 보조 역할만 할뿐 소송 수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광덕 의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이런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특히 침해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면서 오히려 더 전문화된 소송이 되어서 이것은 소송의 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로스쿨제도가 생겨서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대승적인 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광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가의 서적인 ‘유도(有度)’에는 “봉법자강 즉 국강 봉법자약 즉국약(奉法者強 則國強 奉法者弱 則國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이 경시되는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요.

경제는 신뢰라고 합니다. 법치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법 집행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우리의 법치주의는 결코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선진화된 사회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품격 높은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한 선진 일류 국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품격 높은 선진 일류 국가로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권영진 의원 소개로 서울 노원의 지역구민 사십 분이 방청 중이십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는 살려 주겠지. 시민들, 민생들의 삶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1월과 비교하여 살기가 더 좋아지셨습니까? 더 편안해지셨습니까?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농민들, 자영업자들, 근로자 분들, 택시 종사자 분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한미 간 공조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시중에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 경제도 살리고 달러도 벌어들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지금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먼저 동영상을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성질이 뻔쳐서 정말 xx. 찍지 마.”

‘xx’가 무엇을 뜻한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정확하게 그것만 바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신문에, 그동안에 보도된 신문의 내용을 봐서는 다소 적절치 못한 내용의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유인촌 장관이……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막말과 쌍소리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수준의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하고 있는 공인 신분인 언론인들에게, 더구나 엄중해야 할 국감장에서 이런 식의 막말을 한 것입니다.

(「사과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텔런트 유인촌 씨를 아주 좋아하던 팬 중의 하나였습니다. ‘전원일기’ 등에서 보여 준 그의 연기는 국민배우라고 칭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공인 중의 공인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그리고 국정을 최종 심의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전혀 인격과 자질이 결여된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행에 책임지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유인촌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하여튼 경위야 어떻든 간에 당시 국정감사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장관이 국민과 국회 그리고 기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한 점을 잘 감안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해임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런 막말하는 장관을 계속 끌어안고 가자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용기와 무감각에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잘 아시다시피 유인촌 장관께서는 TV에 나와서도 굉장히 수려한 언사로 청중들을 매혹시키고 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번 사건을 매듭을 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다음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 인구비중 국제 비교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이 47.2%, 영국 12%, 프랑스 18%, 일본 32%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넘기시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이런 화면에서 보신 것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90% 정도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이 아주 심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2003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혼잡비용이 12조 원 정도, 대기오염에 따른 비용이 10조 원 정도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수도권 과밀화 지표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보셨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동의합니다.

○양승조 의원 다음 화면 올려 주시지요.

다음 화면!

이 화면은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즉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총리님,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외라도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 증설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 이 내용이라면 수도권 규제는 꺾이기만 남는 것입니다.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의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에서 신설을 하겠습니까?

10월 30일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 수도권 규제 개혁 개선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부 불합리하고 과도한 이와 같은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로 발전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잘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틀을 만들어야겠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발전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지방 발전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말씀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론이 양론되는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발표했는지 정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이와 같은 규제는 합리화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능하면 막고 또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지방과 수도권 간에 경쟁이나 대립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민경제 전체가 성장력이 늘어나고 잠재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방경제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류를 통해서 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사실은 지방과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어려운 시대에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저는 총리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악화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가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한 결과, 일정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진정한 이유가 인건비가 국내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 지대 부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0~80년대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독일 기업이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기업을 신설한 것이 그 나라의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까? 지대는 지방이 훨씬 더 싸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할수록 수도권의 지대는 더욱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총리의 말씀은 근거가 박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저 화면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황입니다. 2000년에 겨우 40개의 기업이 이전했지만 점차 증가하

고 2006년 339개, 2007년 509개 등이 이전해서 7년 만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의 대외경제 여건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100년 만에 맞은 금융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것은 결코 지방과 수도권 간에 경쟁과 대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문제가 지방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또 지역 선도사업 선정 투자, 특별 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지방 이전기업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와 같은 정책을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30개 선도사업 가운데 사실은 이것이 모두 지방으로 가고 3개 만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방과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참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금융 위기에 어떻게 극복방안이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신설법인 수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2003년에 수도권의 신설법인 비중이 63%이고, 비수도권이 37%였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 힘입어 2006년도에는 수도권이 4100여 개, 지방이 4400여 개로 신설 법인 수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 이전기업이 증가하고 지방의 신설법인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균형발전전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양승조 의원님께서 내놓은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도권에 투자되어야 될 어떤 기업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가 되었고, 또 수도권에 규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투입될만했던 해외 외국인 직접투자가 또 안 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번에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해외로 투자하고 해외로 이전한 기업 좀 철저하게 이전원인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그게 수도권 규제에 의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담이 경감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번 살펴 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담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파주에 LCD라고 하는 큰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저게 없었으면 아마 대만으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경제적인 지역에 대한 이득이 굉장히 큰데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한다고 하면 국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득이 되는 이와 같은 정책입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이미 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0월 30일 발표는 그야말로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쏟아 부은 겁니다.

총리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겠다, 환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얼마를 줄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미 이번에 예를 들어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50조 원이 지방에 투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세 프로젝트만이 수도권에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2 외곽순환도로, 인천 지하철 2호선, 수도권 복선전철, 이것 말고는 50조 원 모두가 거의 다 지방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코 이명박 정부가 지방을 홀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서 오면 이것의 일부를 환류해 가지고 지방의 성장기반을 확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것은 곧 종합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올 겁니다.

○양승조 의원 물론 의도적으로 지방을 폐쇄화시키겠다, 갈등을 유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 줘야지 규제 완화를 해서 지방민이 없고 공동화돼서 폐쇄화된 후에 수익을 나눠 줘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지방민들이, 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지입니까?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와 같은……

○양승조 의원 총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기업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예측한 바 있습니까? 또 수도권으로 얼마나 이전할지 예측한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을 총량적으로는 대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은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국민경제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말씀하신 자료도 없고 기업의 이전으로 국내 지역별 총생산 변동액을 예측한 자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부르고 엉터리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 단도직입적으로 10월 30일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완화되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고 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있던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기업이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경제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지방 경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데 심화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또 폐해가 극심화된 시점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이실 것이고 총리께서도 안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방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또 발표를 곧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오늘도 곳곳에서 규탄행사가 있습니다. 지방민들의 분노의 합성을,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이런 입장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수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정책을—원원정책을—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우리는 무조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다 망해 가고,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을 살린 다음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국가경쟁력을 궁극적으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방이……

○**양승조 의원**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정말 지방은 파탄나고 심각한 국론 분열이 야기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생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저희는 총리님께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을 파탄내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10·30 수도권 규제완화대책 당장 철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백혈병 관련 화면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그 화면 좀 잠깐 보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저는 저쪽이 더 잘 보입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 보시는 바와 같이 백혈병 치료를 포기한 환자의 증언입니다.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경우 최고 한 2억 원 정도까지

드다고 합니다.

서민층으로서는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빚더미에 빠지거나 가정경제의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감기에 걸려서 집안이 망하거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없습니다.

○**양승조 의원** 없지요. 진료비가 많이 들수록 보험급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백혈병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한번 앓으면 가정이 파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입니다.

이 보장급여비를 확실하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가, 13대 경제 대국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것 막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우리 장관님께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틀니의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소망이 아주 큰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양승조 의원** 지금 여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우선 정부에서는 일반회계로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70세 이상 어른만 의치를 해 드리던 것을 내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보험으로 전면 적용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1조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1조 원을 만약에 지출하려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4.35% 인상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 부담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국 7개 지역을 돌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공감대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 SOC 투자 증액만 10조 원 됩니다. 또 70세 이상에만 적용한다면 한 4500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장관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전국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지금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통과되었고, 12월 31일이면 아산까지 개통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이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역, 병천 동면역 해서 청주공항까지 연장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는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의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우선 수요 측 정부터 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승조 의원 교통 수요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고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경기 남부-충남-충북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독립기념관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료 관람을 실시하는 것이라든가 또 7개 전시관 교체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독립기념관을 많은 국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박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출범 10개월 만에 경제적으로 향상된 지표는 하나도 없고 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지방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서민층·중산층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으나 서민층·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에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2%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에는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활짝 퍼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희망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영택 의원 소개로 광주 서구갑 지역구민 스물여덟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0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육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또한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30년 넘는 평준화 속에서 우리의 학교는 창의와 경쟁이 없는 획일화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좌지우지되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 격

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의 48%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린 자녀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년 2007년 한 해만도 약 3만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교실을 떠났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에서는 즐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사교육비는 20조 원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80%가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10개월간의 수월성 교육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30년 지난 정부들의 잘못된 평준화 정책의 결과가 아닙니까?

국가의 경쟁력의 근원,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경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고통의 대한민국 교육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여섯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통해서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해서 공교육의 근간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넷째, 국가장학제도와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학입학사정관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부터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재정 GDP 6% 확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감사합니다.

○**권영진 의원**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교

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계속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야당 의원님께서 마치 이명박 정부가 영어 몰입교육에 10% 예산을 쓰라고 지방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 예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식비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정말 교과부에서 영어 몰입교육 하라고 10% 예산 배정하도록 지방교육청에 공문 내려보내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없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리고 지금 급식비 지원이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내년엔 3756억……

○**권영진 의원** 올해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올해보다 한 400억……

○**권영진 의원** 400억 정도 늘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장관님, ‘영어 몰입교육’ ‘몰입교육’ 하는데, 몰입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몰입교육은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말합니다.

○**권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 특히 오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54개 학교에서 몰입교육 하고 있다는데 진짜 몰입교육, 영어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재 몰입교육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규수업에서는 우리말로 강의를 하고 특별활동시간, 재량활동시간 이때에 배웠던 것을 영어로 한번 복습하는 그것을 가지고 ‘몰입교육’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그러면 이런 몰입교육이 이명박 정부 때만 이루어졌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형태의 교육, 정규시간에는 한국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재량활동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경기도에서 몇 개 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이러한 교육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의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참여정부 하에서 30개 학교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늘어난 학교는 19개 학교밖에 없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런데 이렇게 왜 이명박 정부가 영어 몰입교육 하지도 않는데 영어 몰입교육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장관님, 이런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교육비 20조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영어입니다.

○**권영진 의원** 영어가 6조, 수학이 5조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 허리 휘게 만드는 영어만이라도 학교에서 좀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졸업해도 우리 아이들 영어회화도 못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 밟으면 영어회화라도 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런데 왜 오전에는 그렇게 똑바로 대답을 못 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때는 제가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준비는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장관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민국 교육의 신뢰, 그리고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님들은 대답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의원** 장관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해마다 각 국가별로 국가경쟁력, 교육경쟁력 조사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몇 위이고 교육부문은 몇 위로 나왔습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그 통계를 정확히……

○**권영진 의원** 잘 모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55개 나라 중에 31위입니다. 그리고 교육경쟁력은 55개 나라 중에 35위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권영진 의원**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장관님, 그런 수치는 좀 외워 다니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수치를 여쭙어서.

28명입니다.

55개 나라 중에 몇 등인지 아십니까? 50등입니다, 50등.

이런 교육 여건 가지고 어떻게 교육경쟁력 생기고, 이 교육경쟁력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사실 과거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숫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권영진 의원** 자, 참여정부 시절에 2007년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각 부처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잠깐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해 가지고 2008학년부터 2015학년까지 초·중등 교원을 총 1만 6785명 그렇게 늘린다고 했습니다.

○**권영진 의원** 작년 2007년도 세운 계획 대비 올해 교원 충원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올해 참여정부가 세웠던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권영진 의원** 못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올해 예정대로 하면 3467명 충원해야 되는데 1640명밖에 충원 못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는 잘했습니까? 2009년도 충원계획,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미 행안부하고 교과부하고 다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기재부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새 정부 들어서는, 이전 질문에서도 제가 한번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도……

○**권영진 의원** 아니, 교과부에 해당하는 것만 하세요. 교과부에서 증원 요청 안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요청을 했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했잖아요, 9711명?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한 명도 증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위는 어떻든지 간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참여정부도 이것 누장계획입니다.

1999년도에 OECD 국가들이 달성했던 교원 1인당 학생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 세웠는데 이것도 달성해 봐야 2015년 가야 달성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누장계획인데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안 되는 것,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교과부장관으로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저도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장관, 잠깐 들어가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 중요하다는 것 장관님도 동의하시고 교원 숫자 늘려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원이 무조건 증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러면 교원 1인당 28명의 학교를 계속 유지해서 교육이 내실화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아니, 지금 OECD 기준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18명으로 하고 중등학교 17명, 고등학교는 16명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체조를 하더라도 점수를 매기다 보면 제일 잘 매긴 점수 높은 것하고 맨 낮은 것 빼야 되는데, OECD 평균도 보니까…… 이태리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10명짜리를 집어넣어서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18명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이게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권영진 의원** 장관님, 저희 나라가 들어가서

평균이 높아진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아니, 우리나라도 28명인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권영진 의원**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장관님하고 이렇게 다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정부 공무원 동결한다는 방침이……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그리고 아까 교육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공무원 총정원 동결했으니까 동결한다가 아니고 학교에서 보면 지금 시골에 한두 명, 네댓 명 되는 학교 같은 이런 것도 잘 조정하면 거기에 서무 인력, 이런 인력을 교사로 바꿔 주고 다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사를, 필요한 교사를 안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의 직원을 줄여서라도 필요한 교사가 꼭 있다면 그걸 지원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 행안부장관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내년도 장관님 계획상으로 보면 교사 1인당 초·중등·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권영진 의원** 그리고 앞으로 OECD 평균 맞추기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예.

○**권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장관님, 앞서 몇 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내년도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복지예산도 생색내기에 그친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소득층·서민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높게 잡았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복지가족부를 보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13.5%로서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 8.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소득 서민계층 지원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

다.

○**권영진 의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 외에 현 정부 들어서 늘어난 것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는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96만 가구에 6개월에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90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의 884억보다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착실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시행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미수급 빈곤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해서 1만 명 정도 추가로 더 주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이 어려운 때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3만 1000가구에서 3만 9000가구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보육비를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만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하위 50%까지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0세에서 1세까지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10만 원씩 보육수당을 주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하고 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등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가기에 여전히 정부가 갈 길이 멍니다. 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의원** 복지에 소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임용되는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 교단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동감입니다.

○**권영진 의원**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는데 왜 우리 공교육은 붕괴되고 학교 교육

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참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수한 교원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권영진 의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교사 인력의 관리 운영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자원이 가서 그 학교 안에만 가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나 지금 똑같이 보수받고 똑같이 인사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교육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없습니다.

○**권영진 의원**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절대다수 65.7%가 교원평가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아직까지 도입 못 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교원평가제는 저도 바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진 의원** 이제 도입해야 되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예,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입하면서 우리 교사 분들이 지금 교사 인원 충원 가지고 굉장히 인색하게 이야기를 행안부장관 말씀하시는데요, 교사 분들도 힘든 게 많습니다, 잡무도 많고.

그래서 교사안식년제 도입이라든지 해외연수 기회 확대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주면서 이 부분들, 교사 교원평가제 반드시 도입하고 인사와 성과급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 발표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공교육 내실화 말씀하셨는데요, 공교육 내실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말씀하신 평가제도 아주 그중의 중요한 항목이 되고……

○**권영진 의원**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데 있어서

는 수준별로, 지금 평준화를 없애지 않는 한은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학교 내실화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의원**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자, 장관님, 내년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정부 지원 끊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지금 내년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권영진 의원** 385억입니다. 작년보다 절반으로 딱 깎았습니다. 예산 늘리기는커녕 절반으로 깎아서야 이것이 수준별 이동수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국가 지원, 이 부분 정착될 때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전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시도 교육청에서 또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특히 우리는 예산 확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해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특별교부금 편성하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 제도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권영진 의원** 총리님, 수고 많으신데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정부가 최근에 내년도 수정 예산안 10조 팽창 예산 확정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권영진 의원** 이 중에서 교육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아마 4500억 원인가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예, 4500억.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요, 작년 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 부문이 차지했던 비중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줄지 않았나……

○**권영진 의원** 총리님, 돌아가서 확인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권영진 의원** 올해 전체 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 부문이 16.4%입니다. 그런데 올해 짜여진 내년도 예산은 16.1%입니다. 0.31%가 줄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교육, 과학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 예산에서는 왜 이렇게 교육예산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특히 과학교육 또 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9년도 수정예산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그래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이와 같은 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재정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문입니다.

○**권영진 의원** 교육예산 관련해서 교육세가 지금 폐지되는 게 정부에서 대처 방침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권영진 의원**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세마저 폐지되면 2010년 이후에 어떻게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교육세는 폐지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조정해서 이것은 반드시 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 총리님, 지금 교육부총리 과학부총리 없어지고 교과부장관이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반열의 장관으로 됐습니다. 총리님께서 교육 과학기술총리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예산, 교육 부문 챙겨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박 정부와 우리 18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자리까지 이끈 힘,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배움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교육을 만드는 그 숙명, 소명 앞에 우리 18대 국회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권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형환 의원의 소개로 서울 금천구 지역구민 육십 분이 방청 중입니다.

다음은 조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택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일 수고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광주 서구갑 출신 조영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 거리에 나뭇구는 낙엽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과 허탈감이 연상돼서 참으로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 환란으로부터 지난 10년간 국민의 눈물과 땀이 뻗 노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대한민

국은 선진 민주국가의 문턱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어두운 현실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수많은 허물을 눈감아 주면서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은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운 침묵에 빠져 들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연설문을 인용하고 라디오 연설을 흥내낸다고 루스벨트의 리더십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 통합이 바로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루스벨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감세정책과 특혜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호소해도 부족한 엄중한 경제 위기 속에서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와 규제 철폐, 국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억압,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균형 발전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야당을 거리로 내몰았던 정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한 총리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9.1% 수준으로 그동안에 크게 향상은 됐습니다. 그러나 OECD 기준에 의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요.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연평균 11.3%씩 증가시켜 왔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나, 차별화된 정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100대 국정과제 금년에 발표하신 것을 같이 검토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거기의 능동적 복지 분야 내용에

어떤 거 포함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예컨대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런 것이 능동적 복지정책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을 포함해서 능동적 복지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복지라든가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라든가,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정부에 계셨고, 특히……

○조영택 의원 이것을 들은 국민들께서는……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조영택 의원 글쎄, 이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이런 것인가, 이 정부의 철학과 의지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나와서 얘기했습시다마는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정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을 제일 높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아니, 수정예산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조 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분야에 4.6조 원 다시 확대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그렇게 되면 올해 수정예산안에 의하면 SOC 분야가 24조 8000억으로 작년 대비 26.7%가 증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택 의원 이 정부는 토목 사업 아니면 아는 게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SOC를 토목 사업이라고 그러시기보다는 그동안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성장 가운데……

○조영택 의원 별로 낮은 게 뭐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늘어 가는 속도가 낮아 가지고……

○조영택 의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아무래도 토목 분야나 그런 것은 예산 비중이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추세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SOC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가 다 지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영택 의원 아니, 아까 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느 경제학자가 신문 칼럼에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빗대서 대기업, 부유층, 건설업자를 편애하는 ‘편애의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을 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부장관 설명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보건복지가족 세출 예산이 12.3%, 아까 13% 말씀도 합디다마는 산술적인 증가를 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경로연금제도라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가 또 보육 예산이라든가 이런 법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95%는 자동적으로 법정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재량적 지출은 약 68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자세하게……

○조영택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국무총리 한승수 전반적으로 정부로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건복지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고, 물론 이것이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에 충만하지 않을 줄 압니다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우리 속담에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운 위기 속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

전망 강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라든가, 이번에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만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 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국정 조정을 직접 담당했던 우리 존경하는 조영택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정부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서민들이 이렇게 복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로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계셔서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부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중앙과 지방 간의 사회복지 분야 채용 배분을 하면서, 그래서 분권 교부세 제도를 신설하면서 행정 수요나 재정 수요가 팽창될 분야를 예상하지 않고 그 당시의 채용 비율만 가지고 분담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지금 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복지의 균질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차제에,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좀 직접 이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다음으로 지난 10월 27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인권위원회에서는 아직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관계부처에 이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채택이 됐고 발표가 됐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KBS 1라디오에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앞으로 1~2주 안에 결정문을 내려서 결정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오고 정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가 이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조금……

○**조영택 의원** 아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정문이라는 것은 부처에 이송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열 가지 정부 권고사항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언론에 발표도 하고 국회에도 와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한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자들이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이송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일부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라디오 담화에서 사무총장 얘기는 그건 일부일 뿐이지 다른 부분도 또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영택 의원** 그러시면……

○**국무총리 한승수** 전체적인 결정문을……

○**조영택 의원** 그거께 다른 의원들 질문에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대단히 편향적인 것이다’, 총리님 이런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그러면 번복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닙니다. 그것은 신문에 난 것을 봐서는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이와 같은 시위자에 대해 통제를 가했던 것이 불법적이다’ 하는 것만 나왔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시위대가 불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사무총장이 한 것이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조영택 의원** 총리님, 총리님은 유엔총회 의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설치됐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압니다.

○**조영택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조사는 뭘 하는지도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한 것 아닙니까? 개인 간의 어떤 형사사건이라든가 민사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물론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정당방위라든가 최소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탈해 가지고 좀 과도한 행위가 있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래서……

○조영택 의원 촛불집회가 대통령에서 비롯됐다고 그래 가지고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경직된 자세를 가지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조영택 의원 그러면 뭘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공식적으로 결정된 결정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야만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조영택 의원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열 가지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직까지……

○조영택 의원 왜 그저께는 그렇게 편파적이고 편향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내용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택 의원 과거 정부에서도요, 과거 정부 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해서 정부에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알고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여러 가지 농민 사망 사건 때도 그렇고 또 불안 핵 폐기장 사건 때 격렬한 시위 때도 그랬었고, 여러 사건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서 경찰의 과도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권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부도 인권위원회 결정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보시고 개선할 것과 고칠 것과 시정할 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정문이 접수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인권위의 결정 내용을 여러 가지를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다시 또 국가 정체성에도 전하는 시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연이어서 6월 26일 날 총리께서도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다음날 28일 날 쌍방 간의 격렬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강경방침 천명 등의 관여 행위가 피해가 증폭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제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존경하는 조영택 의원님께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문건을 접수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모든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한 수많은, 물론 우리 전의경들도 사랑하는 아우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럼요, 그럼요.

○조영택 의원 그래서 이런 2500여 명 이상의 국민이 부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고민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또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수립을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인터넷 통제 기도와 사이버 모욕죄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는 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된 크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버를 통제하고 이런 과도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사이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언어의 사용, 소위 나쁜 용어를 쓰는 이와 같은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 명예에 손실을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도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

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퍼져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서 다루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조영택 의원** 총리님 잘 아시겠지요,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모욕죄가 가지고 있는 친고죄의 문제점과 명예훼손죄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 것은 처벌 못 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 이것을 피해 가지고 무소불위의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이버 모욕죄의 의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에서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이제 본인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진실을 이야기해도 명예를 훼손당하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죄목을 신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조영택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이 되는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렇게 명예 훼손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예,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까마는……

총리님, 금년 12월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영택 의원** 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이 규정이 그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돼 가지고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여기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도 명예 훼손이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를 중복 신설하는 것, 이것은 과잉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이 문

제에 대한 접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하여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와 같이 악플이 횡행해서 사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와 같은 풍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정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 제출하신 것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으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지하는 그런 법안을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영택 의원** 정당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영택 의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위법 행위가 발생되면 그것을 회수하거나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정하려고 그러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는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부분의 공익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조영택 의원** 당연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불법 폭력 시위를 한 단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공익단체에 소속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어떤 특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공익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그 공익단체 이름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영택 의원** 다른 방송의 공공성 문제, 식품안전대책 문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영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승리로 그간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적 세계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지금이라도 무리한 감세 정책과 대기업 중심 정책, 무분별한 공기기업 민영화 정책 등의 추진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조영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안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 출신의 안형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중산층 가장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후배인 40대 초반의 이 가장, 어느 중소기업의 차장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50~60만 원 정도의 영업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한 달에 실수령액 35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이 친척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월수입 500만 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중순 그에게는 정말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영업 실적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업 인센티브가 다 없어졌습니다. 부인 역시 다니던 가게 임대료도 내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사라

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수입 300만 원, 아파트 대출금 이자·금융 이자로 100만 원, 여기에 두 아이 교육비로 100만 원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남은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결국 최근에 승용차를 팔았습니다. 경조사비 때문에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용돈도 더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제가 더 나빠지면 감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 기를 죽이느니 차라리 제 주름살 하나 늘리고 말지요’, 그리고 노래방에 아르바이트 나가는 주부들 마음을 이해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의 버팀목, 중산층이 서서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고정 수입이 있는 이 가장의 형편은 좀 나은지도 모릅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은 이번 경제 위기에 더욱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11년 전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능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미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대신 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방안’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위해서 1조 원 그리고 9만 명에 대한 추가 실업자 급여 지급 등에 쓰일 3000여억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대상자 확대 등에 2000억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제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기의 악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확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지출 확대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금년도에 1조 1000

역의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지출이 경기 부양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쪽과 서민의 지원에 집중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수, 이번 예산안에서 상정한 157만 6000명에 1만 명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157만 명, 이 숫자 자체가 올해 당초 대상 예상자보다는 2만 명을 줄인 겁니다. 결국 1만 명은 늘렸다 하지만 당초 예상자보다는 1만 명이 줄어든 결론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급 기준은 종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실 저희들은 수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 등 그 수급이 새는 요인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면에서 수급하는 인원수는 153만 3000명으로 예산상으로 추계했던 숫자보다 6만 3000명이 적게 추계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의 157만 6000명은 실제로 금년도에 수급받고 있는 153만 3000명보다 4만 3000명이 늘어난 숫자이고 또 수정예산을 통해서 1만 명을 늘렸기 때문에 금년에 실제 수급받고 있는 인원을 기준 하면 5만 3000명이 늘어납니다.

○안형환 의원 맞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사람을 수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안형환 의원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3000명을 늘려 잡았습니다.

○안형환 의원 앞으로 예상 불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한시적으로 ‘가출, 구급’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중한 질병, 부상’ 이런 것 하던 것을 ‘중한’을 빼고 ‘부상, 질병’ 등으로 해서 내년에 그것도 3만 1000건에서 3만 9000건으로 해서 약 30% 증가하고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교육 지원을 하지 않던 것을 교육 지원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본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국가의 책무입니다.

○안형환 의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5월에 노동부에서 조사한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기업체의 52.6%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또 21%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조사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시점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존 정규직도 감축해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보호법이 당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로 출발하였으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상에 치우친 하나의 그런 입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비정규직 상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게 될 그런 위험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의 경우에 그 2년 기간이 도래되는 근로자가 지금 한 10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해고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런 주변 부분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

안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에 대한 준비,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 비정규직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해소하고 또 원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법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형환 의원** 그런데 어제 장관께서 ‘내년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도 고용 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또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용 확대를 위해서 고용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은 자칫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 고용 유연화 장치의 확대가 실업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냥 한 측면만 보면 고용 제도를 유연화하면 곧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고 근로자의 지위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용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더 증대시켰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선진 유럽 국가들도 그동안 경직된 고용구조를 완화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각국이 서로 열심히 그런 제도를 그동안 개선해 왔고 결과적으로 서구사회의 실업률이 크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의 고용구조가 그동안 너무 경직되었다는 것이 일반 여러 학계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우리의 사회의 가장 약자들인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피곤하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괜찮습니다.

○**안형환 의원**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자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은 2000년에 6437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2174명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4.7명,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위기와 관련된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IMF 사태 발발 전인 96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98년에는 19.9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려가 됩시다라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번에도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자살, 사회학자들은 경제난에 의한 자살을 ‘사회적 타살’ 이렇게까지 정의를 합니다.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 또는 예산이랄까 구체적인 내용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자살 총량의 이유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4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빈곤이나 소외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보고드리고 오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보자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촘촘하게 하고 긴급지원 대상도 늘려나가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그 순간만 피하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길 같은 데 난간이 있어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농약이 함부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가게 한다든지 하는 접근책을 막는 것도 하고, 이분들에 대

한 상담도 강화하고 민간과 함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더라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사회보장안전망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전에 보고드린 것 외에 이와 직접 관련된 예산을 제가 보고드린다면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에 233억이 편성되어 있고,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9년~2013년까지 민간과 같이 할 자살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안재환 씨 자살 관련해서 보도가 난 다음에 이런 연탄을 이용한 모방자살이 잇따랐습니다. 또 최진실 씨 자살 이후에도 일부 언론에서 자살방법 또 자살의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이 계속 늘었습니다.

현행 언론 보도 형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있는데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언론이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싶은 의욕에 앞서서 그 보도 내용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체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러니까 언론사, 방통위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언론 보도의 지나침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계속 인권위원회의 촛불시위 관련 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번 인권위의 조사위원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우리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도 그 같은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촛불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관계자가 촛불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을 조사했다, 그것은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그것은 원래 기피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안형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난이 또 각종 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형 범죄 또 민생형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지금 어쨌든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절도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가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시국 치안 문제가 거의 조용하기 때문에 경찰력 전체를 민생 치안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계형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법무부의 '개인정보유출범죄 관련사건 현황' 이런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1221건이 접수되었는데 올 8월에는 8개월 만에 16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 또는 정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또 유출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존경하는 안형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형환 의원 그리고 요즘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관련 논란이 참 많습니다. 사실 최진실 씨 자살사건과 같이 출처 확인이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댓글 이런 사이버폭력이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1만 명의 자유를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과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공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프라인 사회보다 온라인 사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이런 초기에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고 충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다시 한번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 정부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해외 일부 언론들의 보도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국내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침몰하는 느낌’, ‘한국은 아시아의 아이슬란드인가’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해외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전체적인 조율이나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없애는 대신 부처가 다 자율적으로 홍보를 맡고 저희들은 주로 지원하는 기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이나 또는 저희 해외문화원 또는 홍보관, 여러 방향을 통해서 현지 외신들과의 상시적인 홍보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신들과의 신뢰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사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안형환 의원** 문화부의 예산을 보면 외국의 군소 언론사를 데려다가 시찰시키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유력지,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력지에 대한 대처, 선제적·예방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리고 국가 브랜드……

자, 곧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공식 설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현재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그 브랜드위원회를 좀 격상시켜서 아마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런데 지난 정부 하에서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부 산업자원부 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러면 이번에도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브랜드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사실은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구호나 한 단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 또는 기타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집합하고 정리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자, 계속 방송, 방송 이야기가 많 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의도를 가져서도 또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내부자 고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현 정부에 방송 장악 의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장악이 될 리도 없고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안 듭니다.

○안형환 의원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다시 한번,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능력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언론은 그 자체로 이미 자유롭게 취재 보장하고 또 충분히 의사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형환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안형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마치면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정치란 식량을 충분히 마련하고 무기를 충분히 마련하고 백성이 위정자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자공이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부터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에 무기를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 식량을 버려라, 백성이 위정자를 믿지 않으면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없다.” 하면서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도 야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다는 논어의 가르침은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두려워 하고 국민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신뢰 속에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끝이 없는 위기는 없다.’는 말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안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안형환 의원은 왜 총리한테 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기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오늘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차 조금 전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로부터 양해를 구했고 존경하는 안형환 의원도 물론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분들이 136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86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본철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세웅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혜걸
 김정권 김정은 김중훈 김중표 정조경 정문환 정배순 정조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진표 정영택 정원진 정운선 정조전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정정식 정진래 정진형 정해진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정광덕 정성영 정승용 정주호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진성호 진수희 진구영 차명진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영아 박은수 박선영 최철국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은수 박준선 박은희 최원제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준선 박은희 최원제
 박종근 박종희 배영식 배은희 변응전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박지원 박진우 배재현 배은희 변응전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백성운 백원우 배재현 배은희 변응전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강명순 강운태 고홍길 공성진
 서종표 서청원 서영길 송영길 송영선 송정숙 구상찬 김광림 공성진
 송광호 송민순 송신상 신상진 신성범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심대평 김성순 김소남 김영록 김옥이
 신영수 신지호 안규백 안민석 김용구 김우남 김장수 김재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안효대 김재균 김태원 김정권 김충조
 안상수 안형환 여상규 오제세 김충환 김태원 남경필 박근혜
 양승조 양제창 원유철 원혜영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우윤근 우원희 목유일 호유재 중유상 현박영아 박종희 배은희
 원희룡 유승민 윤두환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무영 이병석
 유성엽 유정현 윤영이 이군현 이범래 이성남 이영애 이윤석
 윤석용 윤광재 이범관 이석현 이영애 이윤석 이인제 이종걸
 이계진 이명규 이범관 이석현 이영애 이윤석 이인제 이종걸
 이미경 이상득 이애주 이윤석 이인제 이종걸 이진복
 이성현 이시중 이인기 이종현 이진복 이춘석 이해봉 이동규
 이윤성 이은재 이정현 이주영 이춘석 이해봉 이동규 이현숙
 이재선 이종혁 이주영 이춘석 이해봉 이동규 이현숙 이경희
 이종구 이철우 이한구 이회창 임동규 임병현 정혜미 정영희
 이진삼 이한구 이회창 임동규 임병현 정혜미 정영희 정진석
 이학재 이화수 이태희 임동규 임병현 정혜미 정영희 정진석
 이혜훈 이영호 임태희 임동규 임병현 정혜미 정영희 정진석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동규 임병현 정혜미 정영희 정진석
 장광근 장세환 장재희 정현희 정몽준 정양석 정영희
 전여욱 정두언 정세균 정장정 김중표 김성철 안홍준 유성엽
 정병국 정의화 김성곤 김옥이 김재경 김충조 김학용 박근혜
 정욱 임의화 김성곤 김옥이 김재경 김충조 김학용 박근혜

정조영 정정식 주광덕 진성호 천정배 최규식 최영희 추미애 허사덕 홍정욱 황우여
 조원진 조진래 조승용 진수희 최경환 최문순 최인기 한선교 허태열 홍일표 홍준표 홍희덕
 정태근 정문환 정성영 진수희 최경환 최문순 최인기 한선교 허태열 홍일표 홍준표 홍희덕
 정하균 정배순 정운선 정승용 진구영 최병국 최재성 허범도 현경병 홍장표 홍희덕
 정혜걸 정조순 정조전 정주호 차명진 최규성 최연희 최철국 최원제 최원제 홍재형 홍재형

○개의 시 재석 의원(117인)

강명순 강운태 고홍길 공성진
 광정숙 구상찬 김광림 김성곤
 김동철 김상희 김선동 김옥이
 김성순 김소남 김영록 김재경
 김용구 김우남 김장수 김충조
 김재균 김태원 김정권 김학용
 김충환 김태원 남경필 박근혜
 나성린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기춘 박대해 박상은 박영선
 박상돈 박상은 배은희 백재현
 박영아 박종희 배은희 배은희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숙미 송훈석 신성범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석용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명수 이무영 이범래 이시중
 이병석 이영애 이윤석 이인제
 이종걸 이진복 이춘석 이해봉
 이동규 임병현 정혜미 정영희
 정성영 정성영 정성영 정성영
 최구식 최영희 최원제 최원제
 허범도 허원재 홍장표 홍재형
 홍일표 홍희덕 홍재형 홍재형

○속개 시 재석 의원(71인)

강명순	권경석	권영길	김낙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나성린	노철래	박근혜	박대해
박보환	박영아	박지원	배은희
서병수	서종표	신지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유일호	윤석용
이낙연	이달곤	이범래	이용희
이재선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장세환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양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해진
진영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허범도	허천	홍사덕
홍장표	황영철	황우여	

○산회 시 재석 의원(13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영진	김광립	김금래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국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영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송훈석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달곤	이무영
이범관	이범래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재선	이정현	이종걸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봉	임영호	임태희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여욱

전재희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장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2인)

이용삼	장윤석
-----	-----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도재문
의사국장	구기성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승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환경부장관	이만희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성부장관	변도윤

○출석 정부위원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	-----

【보고사항】

○의안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조영택·우제창·양승조·박주선·김성곤·김재윤·김효석·송영길·최문순·배영식·김영록·김종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최경환·배영식·고승덕·유일호·김장수·김정권·유승민·김무성·안효대·이인기·강길부·고홍길·백성운·김태원·강석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최경환·배영식·고승덕·유일호·김장수·김정권·유승민·김무성·안효대·이인기·강길부·고홍길·백성운·김태원·

강석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최경환·배영식·고승덕·유일호·김장수·김정권·유승민·김무성·안효대·이인기·강길부·고홍길·백성운·김태원·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장세환·양승조·유성엽·신학용·백재현·강창일·변재일·이미경·최문순·전병헌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장세환·양승조·유성엽·신학용·백재현·강창일·변재일·이미경·최문순·전병헌·이용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韓國道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장광근·정영희·김성곤·정희수·김정권·노철래·김태원·송광호·김성태·강석호·백성운 의원 발의)

11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김무성·서병수·박종근·원유철·허천·김영록·류근찬·허범도·안상수·유정복·송영길·유성엽·유승민·여상규·황진하·조윤선·송영선·박대해·원희룡·이진삼·유기준·정진섭·유재중·이계진·김정권·강석호·이시종·이인기·임두성·이사철·한선교·박준선·김성희·강길부·김학송·정장선·안경률·이인제·김정훈·최욱철·김낙성·윤석용·이명수·신상진·강운태·장제원·심대평·김성수·성윤환·권영진·윤상현·김기현·허태열·신성범·이종혁·박보환·최연희·우제창·이범관·이재선·김효재·안효대·백성운·박상돈·허원제·문학진·윤두환·현기환·권선택·진영·송훈석·홍사덕·정병국·이화수·나경원·권택기·김학용·박근혜·조정태·안홍준·이진복·권경석·김충조·이회창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이춘석·강창일·김세웅·박영선·변재일·양승조·우윤근·이종걸·이시종·전현희·최철국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최경환·배영식·안홍준·유일호·김정권·유승민·김무성·안효대·이인기·강길부·서병수·고홍길·백성운·김태원·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5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이춘석·강창일·김세웅·박영선·변재일·양승조·우윤근·이종걸·이시종·주승용·전현희·최철국 의원 발의)

11월 5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김영우·김성수·김유정·유승민·김성조·권영진·정병국·조윤선·진성호·정갑윤 의원 발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정미경·강성천·고승덕·김성수·안홍준·유일호·유재중·정병국·허범도·홍장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김영우·김성수·유승민·황진하·송훈석·손범규·이범관·강석호·김태원·이경재·정병국·이계진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

(2008. 11. 4 서종표·유성엽·고승덕·양승조·최문순·송영길·심대평·신낙균·김재운·이화수·김영진·송민순·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한수면 소방지역대의 원상 회복에 관한 청원

(2008. 11. 4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1리 596 백중현 외 286인으로부터 송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서면답변서 제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현재 교육현황
자료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외자유치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8. 10. 24 정부 제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지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
한 답변서

(2008. 11. 3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